

정책담당자가 만드는 경제전문지

# 나라경제

199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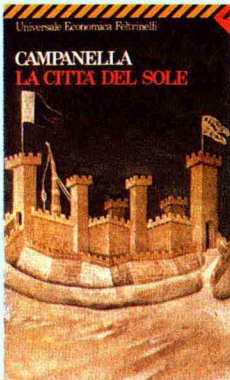
## 특집 / 삶의 질의 세계화

경제정책해설 /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병원, 중소기업청  
맑은 물 공급 위한 상수도 확충계획

세계경제의 현장 / OECD 정책이슈

사회주의 사상의 또 다른 유토피아인

## 토마소 캠파넬라 (Tommaso Campanella)



토마소 캠파넬라(1568~1639)는 1568년 오늘날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지역의 스틸토에서 구두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1582년 도미니크 교단 승려의 설교에 매료된 캠파넬라는 프라카니카 寺院에 들어가 성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수도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총명함이 돋보이던 캠파넬라는 聖 조르시오 모르게토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비롯한 그의 전반적인 철학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당시의 전통적 신학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되었다.

1592년 캠파넬라가 23세 때 간행한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철학」은 방대한 규모로서 당시 異端視되었던 텔레시오의 신학적 사상을 담고 있다.

이단과 분쟁 혐의로 1592년 체포된 캠파넬라는 곧 석방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시작으로 그의 긴 囹圄의 생활이 이어졌다. 1599년 스페인의 점령으로부터 칼라브리아를 독립시켜 공화국을 세우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단과 반역의 죄로 또다시 체포된 캠파넬라는, 자기 자신의 분노를 먹으면서까지 미친 사람 행세를 하여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고 무기형을 받게 되었다.

1626년 석방되었다가 또 다시 투옥되어 1634년 석방된 캠파넬라는 프랑스로 망명하였는데 이곳에서 당시 지식인들의 외면과 멀리 속에서 살다 1639년 사망하였다.

1602년 옥중에서 쓴 「태양의 도시」는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의 原典의 하나로서 또 다른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16세기말부터 17세기초의 성직자이며 기독교사상  
가였던 캄파넬라는 자신의 생존시에는 인정받  
지 못한 선각자였다.

70여권에 이르는 그의 많은 저서 가운데 경제사상  
을 중심으로 한 세속 철학을 담고 있는 뚜렷한 저술이  
바로 「태양의 도시」이다.

「태양의 도시」는 그보다 앞서 理想郷을 꿈꾸었던 토  
마스 모어의 경우에서처럼 새로이 발견된 항로와 많은  
탐험자들에 의하여 개척된 신세계 및 동방 세계의 새  
로운 출현에 자극받아 舊대륙의 모순과 갈등을 空想的  
으로나마 해소해 보고자 하  
는 시도에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다.

캄파넬라는 神의 초현실적  
존재를 부정했다. 신은 없으  
며, 있다면 우리가 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自然뿐이라고  
보았다. 또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성찬행위는 신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인 司祭들에 의하여 지  
배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  
는 것으로 보았다.

「태양의 도시」는 이러한  
믿음을 배경으로 하여 제노  
아의 뱃사람과 예루살렘의

騎士 사이에 이루어지는 對話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  
의 도시에는 힘과 지식, 사랑을 모두 가지고 있는 ‘솔  
레’ 즉, 태양(또는 메타피시코 즉, 형이상학)이라는  
통치자가 있고 그 밑에 힘·지식·사랑을 각각 관장하  
는 세 사람의 신하가 있는 정치체제를 갖는다. 과학과  
지식을 중요시하고 이의 현실적 응용을 강조한 캄파넬  
라는 「태양의 도시」에서 과학의 대중화와 지식의 용이  
한 전파를 위하여 시청각을 모두 이용한 교육의 중요  
성을 설파하였다.

태양의 도시에서의 기본적인 체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처럼 사유재산제도의 철폐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가족제도로부터의 해방이다. 따라서 태

양의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과학 즉, 정신노동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 육체노동을 한다. 태양  
의 도시 시민들은 여섯 살이 되면서부터 과학과 육체  
노동을 번갈아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교육을 받게 된  
다. 따라서 태양의 도시는 과학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시민 계층만이 지배계층이 되는 사회이다.

사유재산제도와 가족제도가 철폐된 태양의 도시에  
서의 근로의욕은 따라서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력 축적  
에 있지 않고 태양의 도시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특히 가족제도로부터의 해방은 性的 해방 즉, 傳來的

一夫一妻制의 폐지를 의미한  
다. 따라서 가족원으로서의  
부부 또는 자식, 형제 자매  
사이의 좁은 의미에서의 사  
랑은 없어지고 모두가 가족  
원이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이 대신 자리잡기 때문  
에 자발적인 근로의욕은 언  
제나 가능하다고 보았다.

태양의 도시는 토마스 모  
어의 유토피아와 여러 차원  
에서 유사하나 교육과 과학  
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차  
이를 갖는다.

이탈리아에 머무르는 동안  
「태양의 도시」를 읽게 된 러

시아의 막심 고리키는 이를 레닌과 루나차르스키에게  
소개하였고, 여기서 소비에트식 선전과 교육 방법으로  
서의 초상화·동상·벽화·현수막 등이 등장하게 되  
고 마침내는 소비에트식 예술이 창출되는 결과가 빚어  
졌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또한 엔겔스의 사유재  
산과 가족관에 관한 견해나 사회주의적 집단농장에서  
의 근로의욕 등에 관한 철학적 기초를 「태양의 도시」  
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글서체

성직자이며 철학자인 토마스 캄파넬라는

「태양의 도시」라는 저술을 통해

또 하나의 유토피아인 이상적인 도시

‘太陽의 도시’를 제시한다

‘太陽의 도시’는 사유재산과 가족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과 과학이 중시된다.

이러한 캄파넬라의 사상은

엔겔스의 사유재산과 가족에 관한 견해와  
사회주의적 집단농장에서의 근로의욕 등  
사회주의 사상의 철학적 기초가 되고 있다.

윤석범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나라경제

역사 속의 경제사상가 ④1

사회주의 사상의 또 다른 유토피아인 - 토마소 캄파넬라/윤석범 · 연세대 교수 .....	2
권두칼럼	
오히려 강화돼야 할 정부의 역할 /이희일 · 前동력자원부장관, 한보경제연구원 회장 .....	6
<b>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b>	
원예특작물을 미래산업으로 키운다/연성주 · 서울경제신문 기자 .....	10

## 특집 **삶의 질의 세계화**

<b>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의의와 향후 과제</b> /추경호 · 재정경제원 .....	16
<b>경제규모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 조성</b> /김형섭 · 환경부 .....	19
<b>균형된 복지공동체의 건설</b> /이기하 · 보건복지부 .....	22
<b>교통환경 선진화로 삶의 질 높여</b> /한현규 · 건설교통부 .....	26
<b>전국민의 주거복지 실현</b> /권도엽 · 건설교통부 .....	29

책과의 만남 「날으는 화살엔 표면효과가 있다」/김성년 · 한국원자력연구소장 .....

### 나라경제 초대석

제도와 경제발전 /김적교 · 한양대 교수 .....	34
기업정보 도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범위 /김재우 · 공정거래위원회 .....	36
경제수상	
• 농업정책의 7대신화 /김영욱 · 농림수산부 .....	38
•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물부족 국가 /김창세 · 건설교통부 .....	39
규제완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건설교통 부문의 규제완화 /조현용 · 건설교통부 .....	40
<b>세계경제의 현상 /OECD 정책이슈</b>	
OECD의 환경정책 논의동향: 경제와 환경의 통합 /정내권 · OECD가입준비사무소 .....	42

만남

김인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규억 · 산업연구원 원장 ..... 47

**경제정책해설**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병원, 중소기업청/송재희 · 중소기업청 ..... 52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선도시험망 구축/김용준 · 정보통신부 ..... 57

맑은 물 공급 위한 상수도 확충계획/류지영 · 환경부 ..... 62

96년 임금정책 방향/김성중 · 노동부 ..... 67

과학기술의 대중화/김덕제 · 과학기술처 ..... 71

출입기자코너

• 과학자의 자존심/백재현 · 서울경제신문 기자 ..... 74

• 미운 시누이?/박태건 · 문화일보 기자 ..... 75

경제동향 나라안 : 국내경기, 안정성장국면으로 移行/조경규 · 재정경제원 ..... 76

나라밖 : 금년 유럽경제, 성장 부진할 듯/이경숙 · 산업연구원 ..... 79

건강한 삶을 위하여 스트레스와 요통/김세주 · 고려대 교수 ..... 82

나라경제 논단

문화자본주의를 향하여/김창선 · 재정경제원 ..... 83

교통의 지능화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합대영 · 건설교통부 ..... 87

忙中有閑 바다낚시/이춘근 · 낚시연합회 ..... 91

제언

수도권정책, 바뀌어야 한다/손재영 · 건국대 교수 ..... 92

통계로 보는 우리 경제와 사회

95년 고용동향/이화영 · 통계청 ..... 96

생활경제상담실 양도소득세/김연근 · 국세청 ..... 100

나라경제 포럼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김상원 · 보건복지부 ..... 102

경제부처발간자료 안내 주요 경제정책자료 ..... 103

# 오히려 강화돼야 할 정부의 역할

## 이 희 일

前 동력자원부장관  
한보경제연구원 회장

20세기 후반기를 특징지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체제가 80년대말에 붕괴되면서 이념전쟁은 끝나고 새로운 소리 없는 전쟁 즉, 경제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살상 무기만 사용하지 않을 뿐 오히려 실제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종래까지 우방이었던 선진국들이 自國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시장개방에 막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자국의 기업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라운드를 만들어 여러 가지 물을 정해놓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경제전쟁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 경쟁력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은 정부의 몫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민간 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모든 면에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행정 측면은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0~7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계획에 직접 참여한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경제전쟁이 치열할수록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전략은 정부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보다 외부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을 개발의 모형으로 삼을 정도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경제발전과정을 돌이켜 볼 때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

우리의 초기 경제개발전략의 기본틀은 부존자원이 없는 좁은 국토, 높은 인구증가율과 일자리를 찾는 많은 실업자, 자본과 기술이 없는 영세한 기업 등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전부라는 현실적인 상황분석에 근거하여 원자재·자본·기술을 외부에서 들여와 내부의 많은 그리고 유능한 인력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음, 상품을 다시 해외시장에 팔아야 한다는 수출제일주의에 두었었다.

해외시장에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대외경쟁력 강화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산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업단지를 만들고 물류를 위한 고속도로와 항만 건설 그리고 공업용수·전력개발을 위하여 다목적댐을 건설하였다.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경제개발을 시동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또한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80년대 이후 政策失機는 후유증 불러

8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 이러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역할을 매우 소홀히 하였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政策失機는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투자는 한번 실행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막대한 추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대외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



“

일부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국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민간 부문의 성장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모든 면에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행정 측면은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로 보는 도로·항만·철도·공업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과도한 금융비용,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고임금, 높은 地價에 의한 비용상승 등이다. 물론 인력확보의 어려움과 고임금은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의한 노동시장의 신규진입 인력의 상대적인 감소에 의한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은 정부가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전략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기적인 처방 중심으로 해결하다 보니 한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통문제가 그러하고 매년 여름이면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공업용수와 식수의 제한 급수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다 같은 경우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만의 경우 하역시설의 포화로 인한 선박 적체로 외국 선박들이 우리나라에 壅港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 강화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의 규제강화와는 다른 말이다. 정부의 역할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하고 재정립된 상황에서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민간 부문이 취약하였지만 이제는 『포춘』誌의 세계 대기업 리스트에 우리 기업이 많이 오르게 될 정도로 민간 부문이 성장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 수행한 많은 부문 중 과감하게 민간 부문에 맡겨야 할 것은 맡기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 자율경쟁과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등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의 입장에서 서서 정책을 펴야 하는 부분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기술 그리고 직업훈련교육 같은 지원 부문의 역할 역시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이나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해야 할 부문과 정부가 해야 할 부문이 있으나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고 수출이 1천억달러가 넘는 거대한 규모로 우리 경제가 커졌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와 수출 2천억달러, 3천억달러에 걸맞는 경제구조가 되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현상타개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앞선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만이 우리는 강력한 대외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

경제정책의 산실을 찾아서

## —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 —



# 원예특작물을 미래산업으로 키운다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은  
우리의 먹거리 중에서 곡물과 육류를 제외한  
모든 음식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담당하여  
원활한 수급을 책임지는 곳이다.  
원예특작물은 농어촌가구 소득의 33%를  
차지하고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원예특작물을 21세기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글 · 연성주/ 객원기자(서울경제신문 기자)

## 오늘

해 봄 우리 농촌에서는 1만 t의 마늘을 밭에다 그대로 갈아 엮는 사태가 발생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또 지난해에는 양파값이 폭락했으며 재작년에는 고추값이 곤두박질쳤다.

과천의 정부제2청사 3동 2층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무·배추 파동, 양파·마늘 파동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말 그대로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다.

채소나 양념류의 가격등락이 심할 때마다 전국의 생산자단체들은 항의방문을 하기 일쑤며 일반시민들의 전화항의와 욕설도 다반사다.

특히 원예특작국에서 담당하는 농산물은 곡물과는 달리 해마다 작황의 변동이 심한 품목들로 생산량의 예측이 어렵고 저장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직원들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을 곧잘 내뱉곤 한다.

지난해에도 고랭지배추의 경우 정부가 농민들에게 공급과잉이 우려되니 재배면적을 줄일 것을 권유했으나 날씨가 나빠 생산량이 급감,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재배농민들에게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항상 손해만 본다”는 원망을 들어야 했다. 이와는 반대로 단위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으로 늘었으나 날씨가 좋아 수확량이 급증, 가격은 결국 폭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농림수산부 원예특작국은 우리의 먹거리 중에서 곡물과 육류를 제외

원예특작은 우리 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하는 부문이다. WTO체제에서 우리 농촌의 살길은 원예특작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농업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만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한 모든 식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를 책임지는 곳이다. 무·배추 등 채소류를 비롯, 양념류·과실류·화훼류·생약류 등 품목이 100가지는 족히 된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밥먹듯이 하고 가격파동이 나면 밤샘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농림수산부내에서도 일이 많기로 소문이 나있다.

그러나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대단하다. 농어촌가구 소득의 33%를 원예특작물이 차지하고 있으며 WTO 체제에서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갖

출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원예특작물의 10a당 소득은 고추는 벼의 2배, 오이는 10배, 사과는 4배, 감귤은 5배, 장미는 19배로 고소득이 보장되고 있다.

게다가 수출잠재력도 있고 내수도 증가하고 있어 생산비 절감, 품질 향상에 성공할 경우 우리 농업 발전의 견인차적 역할을 할 분야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농림수산부의 막내동이인 원예특작국은 지난 94년 12월 농림수산부 조직개편시 중전의 농산물유통국의 채소과와 과수화훼과, 농산국의 잠

업특작과 업무를 이관받아 신설됐다. 원예특작과·채소과·과수화훼과 등 3개 課에 여직원을 포함해 46명의 단출한 식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

원예특작국은 현재 행정직 국장과 기술직 고참과장 3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서강대 철학과를 나와 행시 11회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디딘 崔鍾秀 국장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물가정책국·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18년간 근무한 후 지난 95년 농림수산부로 옮겨와 농업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농수산통계정보관 등을 두루 거쳤다.

부드럽고 원만한 성격에 반해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빈틈 없기로 소문난 崔국장은 오랜 경제기획원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해박한 경제지식을 활용, 농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펼쳐나간다는 점에서 농림수산부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부내의 3D국으로 정평이 난 원예특작국 근무를 자청하다시피하여 원예특작물을 21세기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崔국장은 이렇게 말한다.

“원예특작은 다 죽어가는 우리 농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하는 부문입니다. WTO체제에서 우리 농촌의 살길은 원예특작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농업에도 경영개념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하며 마케팅능력까지도 갖춰야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국의 담당업무 성격상 일도 복잡하고 민원도 많아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항상 직원들의 인화단결에 신경을 써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가능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해 힘쓰고 있다. 바둑이 취미인 崔국장은 ‘매일 폭주하는 업무로 인하여 개인적인 여가활동조차 거의 못하는 직원들이 안쓰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인삼·버섯·생약·참깨·땅콩·누에고치 등 원예특용작물의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의 전체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원예특작과 李德魯과장(서울대 농대 졸업)은 그동안 남들이 어려운 과로 생각하는 부서만 섭렵했으며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장, 식물검역소 해충조사과장을 거쳐 올 1월 국의 주무과장 자리를 맡게 됐다. 직원들이 격의없이 마음을 터놓고 대할 수 있는 온화한 성품인 李과장은 항상 진실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큰형님 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재정경제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삼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인수를 위한 제도정비에 눈코 뜰새가 없을 만큼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생약의 생산과 수출도 담당하는 원예특작과는 수입개방으로 늘어나는 외국산 한약재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생산 한약재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산한약재가 농가의 주요소득 작물일 뿐 아니라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생약산업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참깨를 비롯한 식용유 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외화획득원이었던 잠사업의 유지를 위해 건강식품인 누에가루·뽕잎차·뽕잎국수 등 양잠산물의 수요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농림수산부내에서 제일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과로 소문나 있는 곳이 채소과다. 다혈질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 洪舜基과장은 고려대 농대를 나와 농업진흥청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하여 국립종자공급소 안동지소장, 국립식물검역소 해충조사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채소과는 우리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고 수급안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담당하고 있는 품목만도 무·배추·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와 참외·수박·딸기 등 과일채소류, 양채류·산채류·콩나물에 이르기까지 약 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물가지수에 매일 잡히는 관리대상 품목만도 21개나 된다.

채소류는 특히 전년도 가격동향에 따라 재배면적의 증감폭이 심하고 기후조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을 안정시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정 생산을 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의 마늘파동도 마늘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불과 1만2천t 정도 늘었는데 가격은 3분의 1로 폭락하는 결과를 빚었던 것이다.

가장 속을 썩이는 품목은 단연 무와 배추. 강원도 산골에서 생산되는 고랭지배추는 기상여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이

는 것이 아니다. 날씨가 조금만 나빠도 수확량이 급감, 배추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기상여건이 좋으면 수확량이 크게 늘어 배추값이 폭락하기 일쑤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홍과장은 채소과장 자리에 있는 지 불과 5개월 만에 '만양고추' 피해 보상, 전기정전으로 인한 '고령딸기' 피해보상, 마늘과동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어려운 중에도 해결해 내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과수화훼과는 과실·화훼류의 생산과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WTO 출범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과실·화훼류의 경쟁력제고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기술고시 8회 출신의 姜尙憲과수화훼과장(서울시립대 농대 졸업)은 국립식물검역소 조사연구과장, 채소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쳤다. 일 욕심이 많고 치밀하며 추진력이 있으면서도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姜과장은 테니스·탁구 등에도 능한 만능스포츠맨이다.

우리 과실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姜과장은 과수원의 생산기반시설,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국산과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姜과장은 "거의 대부분 과실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어 외국의 열대과실과 경쟁하여 품질과 가격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

원에특작국은 면적조정 등을 통한 안정생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주산단지 조성을 통한 집단화·규모화 추진을 올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리 과수산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과수화훼과는 과수업의 경우 주산단지 중심으로 2004년까지 1조 4,400억원을 들여 900곳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화훼를 생산하기 위한 유리온실 설치,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도매시장 건설 등에 9,17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에특작국은 면적조정 등을 통한 안정생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주산단지 조성을 통한 집단화·규모화 추진을 올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부가 메뉴식으로 제공하는 사업내용 중 농업인이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원에특작국은 전직원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정책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21세기의 농촌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원에특작국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한민**

삶의 질의 세계화

#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의 의의와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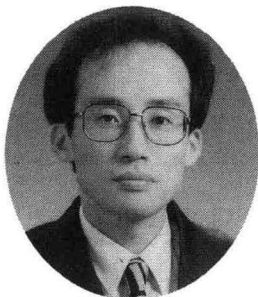


리나라는 95년중에 1인당 국민소득 1만76달러를 달성하여 선진경제권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1960년의 79달러에 비해 약 130배 증가한 수준이며, 1963년 100달러 이후 32년 만에 이룩한 획기적인 성과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3년 100달러에서 77년 1천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14년, 77년 1천달러에서 89년 5천달러를 달성하는 데는 12년이 소요된 데 반해 지난 89년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를 달성한 이후 6년 만에 1만달러를 달성한 것이다.

95년중 1만달러소득을 달성한 것은 「新경제 5개년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연도(96년)를 1년 앞당긴 성과로서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순위가 94년에 이어 세계 3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0위권 이내 국가들은 OECD선진국 및 일부 산유국과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이다.

경상가격 기준으로 볼 때, 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은 歐美 선진국 및 일본에 비해서는 약 10~15년 정도, 아시아의 경쟁상대국들에 비해서는 3~6년 정도 늦은



추경호  
재정경제원 종합정책과 서기관

결과이다. 그러나 경상가격 기준은 물가상승·환율변화 등을 감안하지 못함으로써 경제발전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 가격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1만달러 달성시점 격차가 20년 이상으로 벌어진다.

### 勞·使·政의 합심노력으로 소득 1만달러시대 열어

우리 경제가 95년중에 1만달러소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지난 30여년 동안 양질의 노동력과 왕성한 기업가정신 및 정부의 적절한 경제개발전략 등에 힘입어 연평

균 8% 이상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ATT체제에 따른 자유무역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주도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하였던 점도 그동안 고도성장을 가능케 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3년간 우리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95년 들어서 원화가 美달러화에 대해 다소 큰 폭으로 절상된 데 힘입은 바 크다. 즉, 95년 연평균환율은 달러당 771.1원으로 4.1% 절상되었으며, 국내총생산은 94년에 8.6% 성장한 데 이어 95년에는 9.0%의 높은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1만달러소득 달성이 앞당겨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문민정부 출범 당시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新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新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종 경제제도 및 의식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활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감소시킨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개혁 중의 개혁 조치로 평가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모든 금융거래의 실명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실명제를 시행하여 투기적 목적의 명의신탁을 금지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융자율화와 금융제도 개혁을 통하여 금융산업에 있어서 자율과 경쟁을 확대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금융·토지·환경·무고용 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 자율경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재정개혁을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인력 및 기술 개발,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도 강화하였으며, 개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상품 및 서비스, 외국인투자 개방을 추진하고 OECD 가입 준비와 APEC 투자 자유화 추진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등 경제세계화도 착실히 추진하였다.

### 1만달러소득은 선진경제 진입의 상징적 관문

이와 같이 우리 경제가 경제개발을 본격화한 지 30여년 만에 1만달러소득을 달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

**국민소득 1만달러대  
진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현재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장기구상과  
발전전략을 세워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5년부터 「新경제 장기구상」  
작업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치질없이 추진중이다.**

저도 부끄럼이 없는 팔목할 만한 실적이다.

우선 1만달러 소득은 선진경제 진입의 상징적 관문으로 생각된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우리 경제가 개도국에서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상징적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으로도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고도화된 가운데 조선(2위), 반도체(3위), 철강·자동차(6위) 생산에 있어서는 이미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소득 1만달러를 계기로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이 증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추진중인 OECD 가입을 앞두고 1만달러소득을 달성한 것은 협상과정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임, WTO사무차장 선임, APEC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상 제고와 함께 OECD 가입 등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증대, 여타 개도국에 대한 산업·기술협력 확대 등 그에 따른 의무와 부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1만달러 소득은 우리 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문턱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발전과정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국들과의 본격적인 경쟁대열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견제와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대내적으로도 그동안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증가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욕구도 자기계발을 중시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행태와 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성장체도를 질주해오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이 안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제질서나 제도 그리고 관행·의식면에서 아직도 선진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현실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고, 물량 중심의 성장과정에서 나

(표) 1인당 국민소득 추이

(단위:경상달러 기준)

60년	63년	70년	77년	80년	89년	90년	95년
79	100	253	1,011	1,597	5,210	5,883	10,076

타난 인력·자본·토지 등 생산요소 이용면에서의 高費用-低效率구조도 남아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시점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각오를 바탕으로 도약을 계속하여 선진경제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후진국으로 낙오하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 1만달러대 진입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현좌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장기구상과 발전전략을 세워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5년부터 「新경제 장기구상」 작업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 아직 개도국형 성장구조이나 성장잠재력은 큰 편

선진국들의 소득 1만달러 당시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모습을 비교해보면, 우선 대부분의 국가들의 물가가 2~3% 수준으로 안정된 가운데 경제성장률도 3~4% 수준의 低성장구조에 진입하였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高물가·高성장의 개도국형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보다 낮은 인구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활동 참가로 비교적 안정된 임금을 유지하였고, 노동시장구조도 신축성을 유지하여 빠른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가능했던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임금 및 노동시장 구조가 조기에 경직화되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구조는 선진국의 경우 농림어업 비중이 3% 수준으로 낮

고 제조업 비중은 대체로 25~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림어업 비중이 7%로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은 그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립가공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기계·부품 등 자본재산업 비중이 낮아 실질적인 공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과밀 등에 따른 주택·교통·환경부문의 사회적 비용이 높은 수준이고, 사회간접자본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복지 수준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정부규제나 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생산성도 이들 국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강점으로는 우선 높은 교육 수준의 많은 잉여인력이 존재한다는 점과 세계 최고의 저축률이 유지되고 있고 투자도 왕성하며, 세계의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선진국 경제가 장년기의 안정된 면모를 가진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의 활력이 넘치고 있어 향후 성장잠재력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된다.

## 質的인 선진화로 선진경제 실현의 기틀 마련이 과제

1만달러소득시대의 도래는 우리 경제의 양적인 선진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을 의미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질적인 선진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선진화

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서서 건설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발연대의 경제·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선진경제 실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간주도 선진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물가안정기반의 구축, 경제개방의 확대와 외환·자본자유화의 추진,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등으로 선진경제체질을 확립해야 한다.

이울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기술혁신 및 교육훈련제도의 개편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1만달러 소득 달성을 계기로 자연·주거·근로 환경 등 생활환경의 개선, 한국형 복지사회 실현,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문화·餘暇欲求의 충족 등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체제를 통한 세계 경제의 종합화 및 지역화 경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한 정부·기업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증대에 따라 향후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개인적 삶의 행태에 기초한 다원적 가치체제가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경제주체는 질서 있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경**

삶의 질의 세계화

# 경제규모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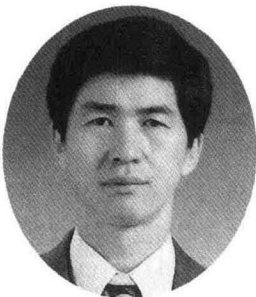
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지난해에는 세계 무역규모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국민소득도 1만달러를 돌파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우리의 산과 하천은 훼손, 오염되었다. 최근에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선용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3월 '삶의 질의 세계화'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어 95년말에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미래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 「환경비전 21」을 수립하였다.

##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 「환경비전 21」을 수립

「환경비전 21」은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쾌적한 환경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김형섭  
환경부 정책총괄과 서기관

밝은 희망과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국토환경을 물려주도록 하며, 한반도 환경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지구환경 보전에도 능동적으로 기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년에 마련된 「환경비전 21」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범적인 환경국가 건설에 목표를 두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환경정책 추진의 근본이 되는 다섯 가지 원칙을 마련하였다.

첫째,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여 예방적 환경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관리를

통하여 생산공정에서부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며 생산과 소비양식 그 자체가 환경친화적이 되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이다.

둘째,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환경피해 복구비와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환경자원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그 대가를 부담하게 하도록 하여 원인지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을 보다 확고히 하여 환경재의 최적분배와 환경관리의 재원 확보 효과도 누리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환경을 보전하는 경제정책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장치를 대폭 활용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환경정보 공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시키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환경비전 21」은 이와 같은 환경 정책추진 기본원칙과 함께 앞으로 달성해야 할 분야별 정책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05년까지 약 127조원의 환경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특히 환경기초시설 등의 보강을 위하여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약 77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명되었다.

#### 대통령이 '환경복지구상'을 발표

지난해의 「환경비전 21」에 이어 올해에는 대통령이 삶의 질의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환경복지구상'을 지난 3월 21일 밝힌 바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녹색환경의 나라를 만드는 데 대통령 스스로가 환경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대통령은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정부 수범원칙, 환경과 경제의 통합원칙, 공동책임과 생활 속의 실천원칙, 사전예방 및 오염자부담원칙, 남북한 환경협력과 전 지구적 공동노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생산과 소비의 녹색화, 환경자치체제 확대, 환경교육 강화, 환경기준의 선진화, 환경기초시설 완비, 환경관리기능 강화, 환경외교 강화 등 7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경제수준에 걸맞는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95년 3월 '삶의 질의 세계화'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어 95년말에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미래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 「환경비전 21」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부행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천명함으로써 환경을 국가정책의 중심축으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분야별 환경투자계획

	96년	97~2001년	2002~2005년	총 계
자연생태계	17	1,901	3,320	5,238
화학물질	3	2,154	1,995	4,152
토 양	51	2,783	2,527	5,361
대 기	27,090	118,178	96,430	241,698
수 질	2,431	16,607	14,664	33,702
상하수도	38,715	197,053	149,353	385,121
폐 기 물	4,674	47,998	36,021	88,693
연구·기술개발	779	5,721	4,285	10,785
지구환경	34	1,171	1,197	2,402
총 계	73,794	393,566	309,792	777,152

(단위:억원)

#### 체감환경의 질 개선

지금까지 정부는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환경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지만 국민의 환경에 대한 체감환경의 질은 그리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년에도 수립된 「환경비전 21」과 환경대통령 선언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며, 특히 96년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할 수 있도록 체감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도시 스모그의 저감대책 추진

첫째, 대도시 스모그의 저감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스모그발생원인 물질인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해 서울시내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매연 여과장치를 부착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7만t 저감시키고, 청정에너지의 공급확대로 산업발전, 난방 부분에서 오염물질 38만t을 감축토록 하여 서울의 스모그 발생일수를 49일에서 45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지하상가·지하철역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하철역·백화점 등의 환기시설 설치기준, 유해물질 발생 건축자재 사용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제고

셋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국 613개 정수장에 대한 정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수질기준 항목을 43개에서 50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수돗물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넷째, 악취발생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도심 소하천을 국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호강 등 46개 하천에 지방양여금 326억 원을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오염정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

우리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도시 스모그의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지하상가·지하철역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개선하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소하천을 국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과 해양의 수질개선을 위해 질소와 인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 쓰레기 종량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다섯째,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및

위생처리를 위해 그동안 종량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으로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과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섯째, 조용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학교 등 청소대상지역에서의 소음·진동규제를 강화하고 고소음 기계류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이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느끼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규모에 걸맞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나라경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나라경제』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경제』는 창간 이후 국민과 정부를 잇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本誌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잡지'가 되기 위하여 독자가 참여하는 紙面을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本誌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의견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원고가 채택되어 '나라경제 포럼'이나 '제언'에 게재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보내주십시오.

\* 원 고 매 수: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 마 감 일: 수시로 접수

\* 보 내 실 곳: ☎ 135-27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나라경제』 편집실

전화: (02)3452-8241 FAX: (02)569-9415

삶의 질의 세계화

# 균형된 복지공동체의 건설

**21** 세기는 한민족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밖으로는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사주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안으로는 성장과 복지를 슬기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종합적 사회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장이나 복지나 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의 장기적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조화 및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복지증진이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 작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청사진과 합리적인 추진전략을 함께 제시하기 위하여 95년 5월 8일 세계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국민복지기획단이 구성되었다.

보건복지부 및 관련부처에서는 국민복지기획단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하여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투자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이기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 복지공동체 구축으로 한국적 복지모형 정립

'삶의 질 세계화'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성장과 복지가 상호 대립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이고 상승적인 관계로 정립되고 둘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서구의 보편적 복지제도와 융화시키며 셋째,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복지에서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기반 구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넷째, 가정·기업·지역·사회·국가로 연결되는 다핵적인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전국민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제1차 사회안전망을, 국민 최저생활수준의 완전 보장과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에 의한 제2차 사회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이다.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과 근로에 의해 자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재훈련·취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전통적 가족복지기능의 강화이다. 가족중시·부모공경·상부상조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예방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공공복지재정 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민간복지투자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 전국민 사회보험시대의 실현

향후 사회보험체계는 '보험수급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개개인의 필요에 부응하여 질적인 보험혜택이 주어지도록 발전시킨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하에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전국민 사회보험화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실현된 전국민의료보험에 이어 98년부터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고 99년부터 산재보험을 전사업장으로, 2000년부터 고용보험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평하고 적절한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교원·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간의 通算제도를 도입하여 각 제도별 가입기간의 합이 20년 이상인 경우 각 제도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하는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실있는 의료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현재 240일인 보험급여기간을 2000년까지 365일로 확대하고, 노인·장애인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며, 의료보험 酬價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酬價 결정과정에 소비자 및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의료보험 관리운영은 현행 조합방식을 유지하되 통합방식의 장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통합전산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근로생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삶의 질 세계화’는 성장과 복지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승적인 관계로 정립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서구의 보편적 복지제도와 융화시키며,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가정·기업·지역사회·국가로 연결되는 다핵적인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위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산재보험제도를 재해근로자 중심으로 개선하며,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가 신속·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재해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치료·심리재활은 물론 직업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에 그치지 않고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직업훈련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인력정책과 연계하여 생산적 근로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고 2000년까지 고용정보 전산망을 완비할 계획이다.

#### 국민 최저생활수준의 보장

빈곤해소정책의 기본방향은 공적 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립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재훈련·취업·자영업창업 등과 같은 생산

적·예방적 복지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최저생계비의 80% 수준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수준을 98년까지 100%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일치시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을 위해 98년부터는 전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 확대하고 육성희비·급식비·교재비도 지원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청소년생활관’을 설치하여 취학전 아동교육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습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본·기술·일자리가 없는 영세민들을 위한 자영업 창업, 일거리 알선, 공동작업, 생산협동조합의 구성 등 자활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교계 등 주민지도자 중심으로 자활후견기관(자활지원센터)을 지정하고 중앙에 자활지원재단(기금)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기본방향은, 가족-이웃-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공동체적 복지, 생산적 복지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 안정된 삶,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효율화하기 위해 각종 복지관을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고 노부모·장애인 부양가정에 대해 소득공제 확대, 주택분양권 우선부여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무의탁노인·아동 등을 이웃에 위탁보호하는 '지역사회가족제'를 도입하고 위탁가정에는 생활보호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에게 소득보장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의 급여수준

을 상향조정하고, 노인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공공기관부터 노인고용을 의무화시킬 계획이다.

노인건강대책으로는 치매 및 중풍 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6개소의 치매요양시설을 98년까지 16개소로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에 인력과 물리치료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노인여가대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노인단기보호·교양강좌·지역사회봉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만 주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98



년부터 1.2급 중증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2000년부터는 지급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를 연차적으로 늘리며, 장애인 생산물품을 판매·관리하는 전문업체의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복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활동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예: '장애인 먼저' 운동)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환경을 개선하고, 2000년까지 기존건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완비토록 하며, 필요시에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에서만 실시하던 전국

장애인체육대회를 98년부터는 시도별로 순회개최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복지를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97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4,800개소, 민간보육시설을 8,900개소로 확충하고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복지재정 확충하고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향후 수년간은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함께 나아가

는 복지공동체의 구축이 요망된다.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 부문의 수급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대폭적인 복지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 등 민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조체제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부문 예산규모는 94년 현재 GNP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복지재정 부문에 대한 지출수준이 국제적 평균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출항목을 우리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들의 평균적 지출 기대치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부문 지출은 기대치의 약 3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이나 민간의 참여 정도는 선진국은 물론이며 현 소득수준에 비추어도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지재정의 취약성과 재원상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복지 부문 예산을 일반회계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2000년까지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 예산과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담세율은 93년의 우리나라 GNP수준과 비슷한 시기의 선진국보다 4%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세율의 인상 등 추가적인 증세방안 이외에도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과세대상의

사회안전망의 구축,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  
전통적 가족복지기능의 강화  
그리고 공공복지재정 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민간복지 투자의  
여건 조성이라는 사회복지  
추진전략에 따라 복지정책을  
착실히 수행하면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균형된 국가발전이  
이룩되어 한국적 복지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저변확대, 조세탈루의 방지, 지하경제의 근절 등으로 과세포착률을 높이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하여 재원조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복지참여 부문에 있어 우리나라는 복지재원의 조달과 자원봉사자 참여 모두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의 복지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하여 연중 모금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기부금의 면세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며, 공동모금에 대하여는 법정기부금과 같이 전액 면세하여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복지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원봉사의 손길이 쉽게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여 자원봉사 진산망을 구축하고, PC통신 등을 통해 손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생자원봉사

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통해 균형된 국가발전 이룩

위에서 제시한 복지정책들을 착실히 수행하면 전국민 사회보험화로 노령·질병·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보호받는 명실상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으로 계층간 화합의 터전이 마련되며, 敬老孝親하는 한국적 가족관계의 전통과 사회복지제도가 조화되는 '한국적 복지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삶의 질 세계화'는 의료보장, 소득보장, 고용, 환경, 교육·문화,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 등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을 우리나라 경제발전수준에 걸맞게 갖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대비하여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어 균형된 국가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중심국가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유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며, 통일한국을 순조롭게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삶의 질의 세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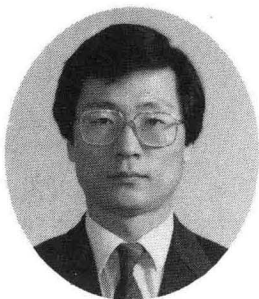
# 교통환경 선진화로 삶의 질 높여

**우** 리나라 교통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서울·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시민들이 매일매일 겪는 교통소통이나 주차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속도로·철도·항만·항공 등에서 겪는 지역간 교통문제이다.

## 도로교통혼잡으로 연간 8조원 낭비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겪는 대도시에서의 교통난은 버스나 택시 등 수송수단이 없어 만원버스처럼 사람들이 짐작 취급을 당하는 소위 후진국형 교통난이었으나, 그동안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에는 차는 많은데 도로 등 교통시설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소위 선진국형 교통체증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난은 어느 나라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꼭 겪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공단에서 항만으로, 도시에서 지방으로 화물이나 사람이 이동하는 데 겪는 교통난도 전국이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처럼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부산간 하루 왕복횟수도 지난



**한현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

88년에 1.7회이던 것이 94년에는 0.9회로 줄었다. 철도도 주요 간선 철도 대부분이 용량한계에 달해 더 이상 열차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항만도 화물과 선박이 이삼일씩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통문제는 대도시에서 생활불편을 초래해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나 항만 등에서 낭비되는 물류비용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연간 8조원이라는 돈이 낭비되고, 물류비용이 제조업매출액의 17%나 달해 미국 7%, 일본 11%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

무한 경제전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만이 나라발전을 약속할 수 있게 된 요즘, 도로나 철도·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더없이 중요한 국력이 되었다. 자본·노동·기술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나 도로·항만 등 SOC는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OC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중국·일본·한국 등 동북아경제권 시대를 맞이하여 이들 국가간에 교통·물류 중심지(HUB)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HUB항만이나 공항건설, 고속철도 건설, 기간 고속도로망 형성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투자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 교통환경 선진화 위한 정책 추진

다가오는 21세기 고소득시대에는 삶의 질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인 시설확충뿐만 아니라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국민적 욕구

에도 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세계화 진전에 따라 교통부문에서도 국가경쟁이 심화될 것이므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접 국가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교통환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인 교통수요를 보면 2011년까지 국내여객이 현재의 2.2배, 화물이 3.8배로 증가하고 자동차대수도 현재의 800만대에서 인구 2인당 1대가 되는 2,400만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교역과 교류의 확대에 따라 국제여객이 현재의 4배, 화물이 6배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국·일본·극동러시아 등 동북아권역내의 해운·항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재원과 가용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면 현재의 3배가 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하되 교통시설의 운영체계 및 관련제도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데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시책을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대도시교통난 해소하고 고속간선교통망 구축

첫째는, 우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피부르 느끼고 있는 불만사항인

교통문제 해결은 생활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변수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교통문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대도시교통난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송효율이 높은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위주로 나아가야 한다. 지하철을 확충하고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병목구간이나 신호등·입체교차로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교통질서를 지키고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길러 나가는 것도 국민 각자가 해내야 할 몫이다.

둘째는, 고속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위주의 장거리 고속교통망과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접근할 수 있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형성하고 고속교통망과 손쉽게 연결될 수 있는 지선교통망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전국 반일생활

이 가능한 '고속간선교통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동북아지역의 교통·물류 중심지를 지향

셋째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추공항과 항만을 어떻게 개발·운영하느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경제권이 급격히 발전하여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경에는 EU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은 현재 중추공항과 항만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간사이공항, 홍콩의 첵랍콕 공항을 비롯하여 중국·태국·말레이시아 등도 대규모 중추공항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개항 목표로 연간 2,700만명 규모의 인천국제공항을 추진중에 있다. 항만의 경우 홍콩·싱가포르·카오슝(대만)·고베(일본) 등 대규모 항만건설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도 부산 가덕도항과 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추항만으로 육성코자 추진중에 있다.

#### 민자유치 확대하고 물류체계를 선진화

넷째는, 교통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첨단교통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60년대에 시내버스와 선박·항공기 등을 민영화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고 오늘날과 같은 세계유수의 해운·항공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교통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고 재정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의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해야만 비용절감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첨단교통체계·위성항행시스템 등 첨단운영체계를 개발하고,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한국형 고속철도·도시교통형 자기부상열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물류체계를 하루속히 선진화하는 것이다.

물류는 본래 기업이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물류합리화의 주체도 기본적으로 제조·유통·운수업체 등 민간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측에서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 먼저, 민간의 물류개선 노력을 제약하는 요인을 찾아 해결해 주고 거시적인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철도·항만·화물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대규모 물류기지를 건설하며, 물류장비의 표준화나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통망을 구상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통망을 구상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교통체계가 서로 많이 달라 남한은 도로 위주, 북한은 철도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 이전 남북교류의 초기단계에서는 제도적 합의만으로도 수송이 가능한 항공과 해운을 위주로 교통시설을 연계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량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철도망을 연결하고 인적 교류에 대비해 단절된 도로망 연결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시에는 남북한 교통체계의 이질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북한지역 철도의 개량·복선화, 도로망 확충, 항만·공항건설을 추진하고 통일에 따라 예상되는 수도권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통과교통을 우회 처리할 수 있는 교통축 개발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

불과 5년전만 해도 주택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골칫거리였으나 이제는 교통문제가 주택을 대체해서 새로운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교통문제 해결은 생활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다. 교통문제를 지혜롭

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교통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 교통문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먼저,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이 차질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획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장기계획은 21세기의 교통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개략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개별사업을 시행할 때는 여건변화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여 연동계획(Rolling Plan)화하는 등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계획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합치되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교통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삶의 질의 세계화

# 전국민의 주거복지 실현

70

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 해결, 주택가격의 안정, 서민주택 공급확대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주택부족이 심각했으며 이로 인한 주택가격의 상승, 투기만연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만호 계획과 「新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택지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였다. 그 결과 91년 5월부터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5년째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84%에 이르는 등 주택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제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보인다.

이처럼 주택보급상황이 개선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 서면서 주택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 좋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택정책도 이제 단순



권도엽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

한 양적인 확대보다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주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주택부족은 크게 완화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우리나라의 주택보급 상황을 보면 90년대 이후 매년 60만호 이상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공급하여 주택부족이 크게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가구수에 비해 주택이 모자라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9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84.2%로 전국적으로 180만호의 주택이 부

족하며, 수도권은 경우는 주택보급률이 78%에 불과하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 확대에 따라 91년 5월 이후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임차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은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집값 안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계속 증가하여 96년 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3만5천호의 미분양주택이 누적되어 있다.

주택의 질적 상태는 크게 물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요인은 주택의 구조적 부실이나 결함 여부, 목욕탕·수세식화장실·온수사용 등 부대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채광·환기·습도의 정도, 1인당 주거면적, 방당 거주인구 등으로 우리나라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목욕탕·수세식화장실의 설치율은 90년에 각각 44.6% 및 45.0%로 선진국의 90% 이상에 비해 크게 낮고, 1인당 주거면적은 14.2㎡로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 일본의 2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방당 거주인구도 1.5인으로 과밀한 상태이다. 특히 도시내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질적으로 더욱 열악한 실정에 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는 교통의 편리성, 소음·공해 여부, 인근 자연과의 조화, 공원 등 휴식공간의 근접성 등 주거환경과 관련된 사항과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 안전 등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소득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주택수요형태도 변화

국민소득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주택수요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수요의 다양화는 각 개인의 생활목표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한 물리적인 기능을 갖춘 획일적인 형태의 주택이 아닌 개인의 취향에 맞는 주거형태를 가지려는 욕구로부터 나타나며, 양질의 주택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주택의 양적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 2006년경에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여 주택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공급할 계획이다.

보다 나은 환경과 편리한 시설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질적 욕구는 소득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욕구의 형

태도 건물구조의 다양화, 홈 오토메이션 등 첨단시설의 설치, 고급내장재의 사용 등 건물내부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공동생활의 영위 등 보다 문화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구조와 노동인력구조상의 변화가 본격화될 경우 대도시의 광역화가 한계에 이르면서 도심부의 고밀도화가 진행되고 원룸주택과 직장겸용주택, 레저용 주말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직장 등 사회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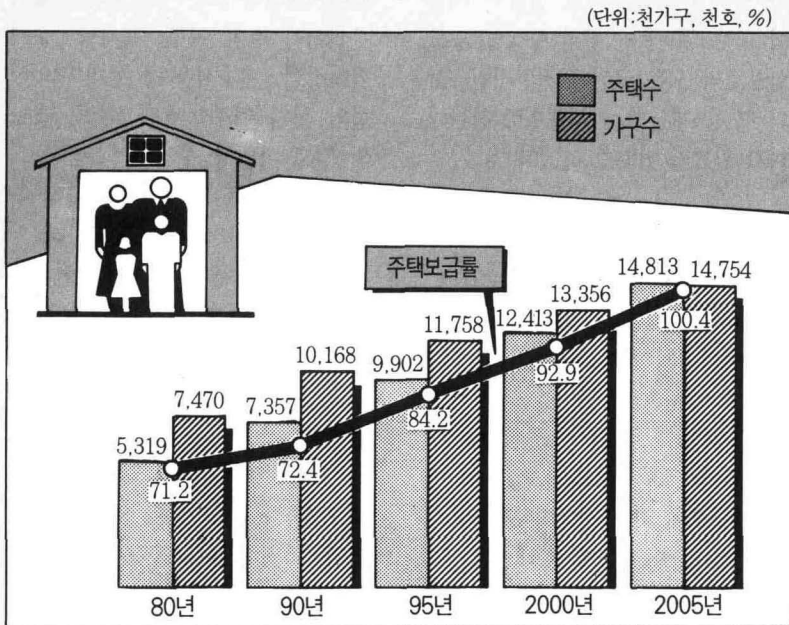
### 삶의 질 제고 위한 주택정책 추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주택의 품질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05, 2006년경에는 주택보급률 100% 달성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주택수요를 전망해 보면, 앞으로도 신규주택수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노후화, 양질의 주택에 대한

(그림) 연도별 주택보급률 및 향후 전망



註:건설교통부 추정자료임.

선호증가로 기존주택의 재개발·재건축 및 개량·보수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 2006년경에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여 주택부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매년 50~60만호의 주택을 향후 10년 동안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공급확대의 최대 애로요인인 택지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택지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발가능지가 부족한 대도시 지역에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하철의 연장건설, 순환고속도로 등의 개설에 맞추어 광역적 차원에서 수급전망을 기초로 충분한 택지를 단계적으로 개발·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택지개발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교통·토지이용 등 유관부문 계획을 충분히 감안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해 나가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택건설기준과 개발계획심사기준을 보완하도록 하는 한편, 대도시 인근의 노후·저밀도 주거지를 도시의 수용능력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무주택서민도 低利로 쉽게 용자를 받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 계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융자액을 대폭 늘리는 한편, 소득계층에 따라 자금규모 및 이율 등을 차등지원하여 형평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주택금융의 경우도 민간역할의 확대에 부응하여 점차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도입된 '주택할부금융'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택구입자 금융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저당대출채권 유동화제도를 도입하여 주택구입자금의 80% 이상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의 질적 문제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거주주택 중 대부

분이 수세식화장실이나 목욕탕 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질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질적요건과 가구구성에 따른 주거공간면적, 방 수 등 요인과 전체주택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주택이 갖추어야 할 복지적 기준으로서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공주택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좋은 주택을 개발·공급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민간업체로 하여금 현재 아파트 분양시 실시되고 있는 마이너스옵션제(입주자 스스로 내장재를 설치토록 하는 제도)나 사양선택제(기본품목에 대체되는 선택형 내장마감재를 제시), 가변형 벽체(벽체를 입주자가 자유로이 이동시킬 수 있는 방식) 등을 적극 활용토

(표) 주거수준의 국제비교

(단위:호, m<sup>2</sup>, 인,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100인당 주택수	20.0(93년)	42.9(91년)	41.1(91년)	42.1(91년)	46.3(90년)	34.2(88년)
주택당 평균규모	84.2(90년)	162.0(89년)	94.7(88년)	86.6(91년)	85.4(90년)	92.6(88년)
1인당 주거면적	14.2(90년)	55.8(89년)	35.2(88년)	47.5(89년)	40.6(89년)	26.1(88년)
1방당 거주인수	1.5(90년)	0.4(85년)	0.5(88년)	0.6(78년)	0.7(84년)	0.7(88년)
목욕탕	44.6(90년)	97.6(83년)	99.0(91년)	96.0(87년)	92.4(92년)	93.5(93년)
수세식화장실	45.0(90년)	97.6(83년)	98.9(71년)	97.1(78년)	93.3(92년)	75.6(93년)
옥내수도	76.6(90년)	98.4(83년)	-	99.2(72년)	99.2(82년)	94.0(83년)

자료:건설교통부, 주요 통계자료

록 유도하고 재택근무 확산, 노령가구 증가 등 수요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3대 동거형 주택, 임대가구 분리형 주택, 원룸주택, 주상복합주택, 실버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수요에 맞게 공급되도록 해 나갈 것이다.

한편, 민간이 시도하기 어려운 미래형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민간부문에 성과를 전파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민간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보아가며 분양가자율화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과도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등 시장자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인 주택개발 형태에서 탈피하여 신개발지의 토지이용계획수립시에 중·저밀 공동주택지의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동일단지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혼합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주택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사회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민간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94년 민간임대전문업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5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구입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안정도도 등 임차인을 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공공주택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좋은 주택을 개발·공급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앞으로 중산층의 임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 발전시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 임대주택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현재 5년간 임대한 후 분양토록 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토록 하여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취득세·등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규모자본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재고가 전체 주택재고의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이룩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앞으로 신규 공공임대의 건설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특히 97년부터는 공공부문

공급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임대주택재고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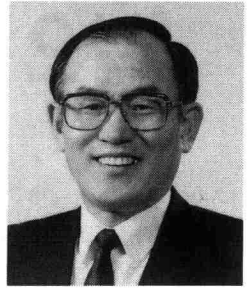
이와 병행하여 민간임대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에서도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 입주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 가구구성, 기타 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여 주택이 배분되도록 입주자 선정을 해 나갈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변화는 주택시장의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주택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은 자율화·개방화 및 지방화로 요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화 및 민간부문 역할의 확대를 주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전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문]



# 제도와 경제발전



김적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필자가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에 대한 연구는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막대한 원조자금을 투입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인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1970년대 중반 미국의 하버드(Harvard)대학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른바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가 한국에 오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국경제학자들의 한국경제발전 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한국정부가 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일련의 자유화 조치 즉, 환율 및 금리의 현실화, 수입규제완화 및 수출지원강화 등 자유화 정책을 실시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장기구를 잘 활용한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일반화에 대해서 당시 KDI를 방문하였던 하버드대학의 메이슨(E. Mason)교수는 회의적이었다. 물론 한국의 자유화 정책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부의 적절한 개

입과 관·민 협조체제 등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모든 것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경제발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후진국이 금리와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몰라서 경제발전 을 못 이루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후진국에서의 시장기구의 작동은 경제주체의 전근대적 의식수준 등 제도적 요인 때문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기구를 보완하거나 대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고도성장은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는지 시장기구의 활용만으로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던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역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 연구는 한국경제의 근대화과정 연구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은 연구 보고서가 되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新교전학파적인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후진국 개발문제에 있어서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제도문제를 중시하는 학자는 거의 없었기에 메이슨 교수의 주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경제발전 에 있어서 정부역할에 대한 논쟁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제도문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경제발전에서 비시장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더욱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특히 경제학에 제

도문제를 도입한 코즈(R. Coase)교수와 노스(D. North)교수가 잇따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제도 경제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여 이른바 新제도경제학과 (New Institutional Economics)를 형성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에 있어서 제도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적인 정부의 역할이라는 현실 경험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新고전 학파의 주류 경제학이 가진 비현실성에서 기인한다.

新고전학파에 의하면 시장에서는 정보가 완전하고 인간이란 완벽할 정도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행위는 시장기구의 가격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 따라서 경제주체간의 교환행위에도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령 기업이 교환행위를 하는 경우에 계약자를 찾고 계약자와 협상을 하고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의 여부를 점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거래비용 예컨대, 각종 활동비·중계료·변호사비용·수수료 등이 들기 마련이며 이는 기업에게 그만큼 비용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비단 기업간의 교환에서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인허가에 따른 각종 비용, 로비활동비,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의 낭비 등 유형·무형의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규제가 많든지 또는 제도나 법률이 투명성이 없을 때 이러한 거래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고 이는 그만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노스에 의하면, 제도는 교환과 생산관련 비용을 통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교환에 관련되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 하고 생산에 관련된 비용을 전환비용(transformation cost)이라 한다. 그에 의하면 총 생산비용을 거래비용과 전환비용을 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新고전학과 경제학이 거래비용을 전혀 무시한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이다.

가령 기업을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수집비, 인허가를 받기 위한 각종 수수료,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낭비 등 즉, 거래비용이 드는데 이는 행정절차,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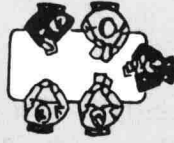
부의 규제 정도, 법률의 투명성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적게 들 수도 있고 많이 들 수도 있다. 전환비용도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자금조달이 얼마나 쉽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금융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노동에 대한 비용도 그 나라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형성되고 있는냐 또 노동시장이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냐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이 실제로 전환비용에서도 상당한 거래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부담을 감해 줌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제도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학이 지금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은 큰 과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학이 현실과는 유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新제도경제학이 제도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화한 것은 경제학을 보다 현실성 있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대부분이 제도문제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장기구가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법이나 관습·의식수준 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의사결정도 시장기구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료조직이나 정치적 집단 및 이익단체가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제도의 문제로서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제도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제도개혁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느냐에 달려있다 하겠다. **문재**



기·업·정·보

# 도서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범위

김재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서기관

전문가격 할인점인 '프라이스클럽'이 출범하던 95년말의 일이다. 프라이스클럽이 베스트셀러 등 인기도서를 정가의 70~80%에 할인 판매하자 기존서점 등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여 결국 서점들의 단체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출판사 등에 책의 공급중단압력을 가한 적이 있다.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서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도서를 할인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정가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존 서점 간의 다툼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법적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관련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

일반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이나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거래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은 모든 대리점에게 같은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직판점에서의 상품가격을 외판원이 파는 가격보다 낮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저

작물(법정재판)과 일정요건 즉,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고, 일반소비자의 일상사용품이며,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받은 경우(지정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출판물과 기타 저작발행물에 대해서는 문화상품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재판매가격유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면 재판매가격유지가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로 정의함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거의 모든 저작물이 재판매가격유지 허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 재판매가격유지가 시행되고 있는 저작물은 도서·신문 등 출판발행물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상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허용▶

공정거래법상 도서에 대한 재판매 가격유지가 허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서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를 하여도 된다는 의미이며, 도서는 반드시 재판매가격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출판·서적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 중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도서의 정가유지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상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공정거래법상 도서에 대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도서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매 가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출판사가 전국의 서점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가 발간하는 도서의 재판매가격(정가)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판매 분야의 경우 유통사업자인 서점의 수가 1만2천여 개 정도로 많아 출판사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전국의 수많은 서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서적유통과 관련한 단체 중심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련)가 도서재판매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출판사와 서점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즉,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여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이나, 도서의 경우만 예외를 허용하되 사업자단체가 재판매가격유지에 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위원회가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내용을 심사하고 있다.

출판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해 출협과 서련간 각기 구성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1986년 6월에 체결된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해야 하며, 출협과 서련이 각각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하고자 하는 출판사와 서적상의 위임을 받아 포괄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둘째, 서적상 또는 서련은 재판매 위반행위를 감시, 발견된 위반사실을 출협에 고지하고 출협은 위반서적상과 해당계약출판사에 위반사실을 통지하며 출판사는 위반서적상에 대해 경고·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는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도서의 재판매가격유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위원회에 신고되어 시정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법상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허용의 의미를 잘못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빈발하는 사례는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서점이 도서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타서점들이 공동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이다. 즉,

타서점들이 도서정가를 지키지 않는 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출판사나 도매상에 대해 도서공급을 중단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거나, 그 출판사나 도매상의 공급도서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임으로써 할인서점에 책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적의 정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별사업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개별서점이 「출판물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도 자기의사대로 책을 싸게 팔 수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판매가격유지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재판매 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한 출협이나 서련이 위임을 받지 않은 출판사나 서점에 대해 협조요청 등으로 재판매 가격유지를 권장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출협 혹은 서련은 사업자단체로서 위임을 받은 출판사나 서점만을 대신하여 체결된 재판매 가격유지계약의 범위내에서 위반사업자를 고지하는 역할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위임 않은 출판사나 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게 서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단체에게도 허용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공정거래법의 법리를 잘못 오해한 것이며 재판부도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법원정리**

이 것은 우리나라 이야기  
기가 아니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다. 농업인은 첨단기술시  
대에 살고 있는데 농업정책은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정책의 잘못을 꼬집은 책이  
있다. 「농업실패」(The Farm  
Fiasco, James Bovard 著)  
라는 책자인데, 농업정책이  
어떤 식으로 매년 수십억달러  
를 낭비하고, 못하는 사람을  
희생시키며, 議員과 관료가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하는가  
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 소  
개하지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  
책이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다고 혹평한 부분

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이 잘못된 믿음은 무의미한 개  
념과 통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첫째, 미국에 200만 농가가 있다는 믿음이다. 농산  
물 판매액이 연 1천달러만 되더라도 농가로 분류하여  
농업인수를 부풀려 농가지원을 늘리고 있다.

둘째, 농업인이 도시민보다 가난하다는 믿음이다. 농  
업인이 가난하다고 믿고 지원을 늘려가는 한 비농업인  
과의 불평등은 심화된다.

셋째, 농업인은 비농업인과 똑같은 소득을 올려야 한  
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똑같  
은 소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할 도덕적 권리는 없다.

넷째, 농업인은 생산비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믿음이다.  
다른 사업의 경우는 이윤을 남기고 상품을 팔 수  
없으면 생산비를 낮추거나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다섯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다른 경제부문에 도움  
을 준다는 믿음이다. 농업인의 비중이 높을 때는 농가  
경제의 건강이 국민경제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지금은 다르다.

여섯째, 농가가 모두 똑같다는 믿음이다. 앞서가는  
농가와 뒤쳐진 농가와는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 농업정책의 7대신화



김영욱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

정부지원에 있어서는 모든  
농가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취급한다.

일곱째, 농가파산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믿음이  
다. 농가가 파산한다고 해서  
농지가 사라지거나 대다수  
농가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  
니다. 정책이 생산성이나 효  
율을 높이기보다는 경영이  
부실한 농업인을 계속 농사  
짓도록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일곱 가지의 잘못된 믿  
음이 옳은 지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뿌리가 되는 믿음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미국  
에서만 그것도 농업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신화처럼 믿어왔던  
생각이 미신에 불과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책  
은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고 계획이 세밀한들 기초개념과 통계자료가 잘못되  
었거나 잘못 활용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善意는  
정책실패의 변명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정책실패는 정책수립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과  
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초공사  
라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통계수치를 잘못 생산한다면  
그 정책은 물론 실패할 것이다.

제대로 생산되었다 해도 이를 잘못 이용할 때 마찬가지로  
결과가 될 것이다. 완벽하게 수립된 정책이라도 집  
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정책수립이 잘못되  
었는지 집행이 잘못되었는지 간에 그 원인을 통계자료  
의 신뢰성 부족에 돌리는 경우가 있다. 집행과정의 과  
오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도 통계  
탓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이는 통계의 신뢰성 문제라기  
보다는 자질의 신뢰성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재**

#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물부족 국가



김창세  
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

우리나라는 물위기를 맞고 있다. 첫째는 양의 위기이고, 둘째는 질의 위기이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1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물부족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수요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정부에서 꾸준히 수자원공급시설을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뭄 때는 남부지역 78만명의 주민이 제한급수를 받아야 했다. 이에 비해 댐을 건설하는 데는 예전에 비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갈수록 심해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강들은 좀체로 수질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낙동강 물금지역의 경우 BOD가 90년 3.0에서 95년 5.1로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 많은 오·폐수처리장이 건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에 대한 배출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역 전체의 오염관리에 절대 필요한 총량규제는 실시가 요원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첫째, 양적인 면에서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망의 대폭적인 확장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난 3년간 계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은 지역에서는 물부족을 겪지 않았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는 2011년까지 34개의 다목적댐과 38개의 광역상수도가 추가로 건설되어야 물부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 시설이 각각 9개와 13개에 비해 볼 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것이다.

둘째, 수질면에서는 보다 엄격한 수질기준을 설정하

고 배출규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오염처리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댐의 방류량을 늘려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나, 쓸 물도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희석용으로 물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수량과 수질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우리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물관리의 두 근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 댐과 광역상수도 덕분에 대다수의 국민이 가뭄시에도 물부족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가 수량확보에서

수질보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수질이 ‘상대적 필요’라면 수량은 ‘절대적 필요’라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최근 들어 물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수량과 수질을 각각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한군데서 담당하도록 통합하는 것이 옳으나 하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다.

수량과 수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개발과 보존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가 여름 한철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또 물수요 증가가 빠른 나라에서는 댐 등 많은 수자원 시설을 건설해야 하므로 통합할 경우 수량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수질보전 업무는 그 본질이 배출기준 설정과 배출규제 즉, 경찰기능이므로 개발업무를 같이 담당하면 수질마저 지키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기능을 각각의 전담기구에 맡겨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두 기능을 통합하여 반대방향으로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도록 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하겠다. **김원**

# 건설교통 부문의 규제완화

조현용/건설교통부 행정관리담당관

정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그동안 규제완화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의 각 부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의 규제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고 국가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국민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도 있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국제화의 세계 경제조류,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기존 제도로는 이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으므로 정부역할과 기능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정부와 민간 간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부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시기이므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규제' 또는 '행정규제'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법규 또는 법

규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각종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어느 정도의 규제가 적정 수준의 규제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최소 수준의 규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규제의 유형을 진입·가격규제 등 경제적 규제와 환경·안전규제 등 사회적 규제로 구분할 경우, 어떤 유형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강화해야 할 것인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작년말 현재 총 910건의 과제 중 83.5%인 760건을 개선완료**

건설교통부의 규제완화작업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편의와 편익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규제완화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며 기본방향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편의와 행정능률에 치우친 법규정과 행정절차를 재검토 및

개정함으로써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3년부터 소관업무인 국토개발, 도시, 주택, 건축, 수자원, 토지, 건설업, 도로운송, 화물운송, 항공, 자동차·건설기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여 총 910건의 쇄신과제 중 작년말까지 83.5%인 760건을 완료하였다.

또한 분야별 쇄신과제를 살펴보면 주택도시 부문이 34%인 31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육상운송 116건(12.7%), 국토·토지관리 101건(11.1%), 건설 부문 88건(9.7%), 자동차·중기관리 75건(8.2%)의 순이며, 도로·물류·항공 부문은 40건 수준으로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완화 요구가 작다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과제가 채택된 후 이를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해당규제의 폐지, 규제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민간위탁 등 규제주체의 변경,

규제수준의 조정 및 직접적·사전적 규제의 간접적·사후적 규제로의 변경, 규제절차의 간소화가 있다.

우리 부에서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규제완화과제 정비대상은 법령과 준법령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법령은 사업의 인·허가 진입규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반면, 훈령 등 준법령은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적 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 부문에 관한 규제완화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법령 성격의 훈령·행정지침·예규·질의회신 등을 정비하였다. 총 820건의 각종 준법령 중 154건을 폐지하였고, 500건은 32건으로 통합하였으며, 나머지 166건은 개선·보완함으로써 준법령 622건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준법령정비 우수 부서에는 표창·포상금을 수여하였으며 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완화대상과제에 대한 규제완화백서 「건설교통행정 이렇게 편해졌습니다」를 95년말 발간하여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및 업체 그리고 각 대학에 널리 배포하였다.

한편, 법령정비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일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법」으로 통합추진,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 추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가칭)」 제정 등과 같이 법령개정시 관

련 부처와의 협의 및 각계 의견수렴 등 전반적인 종합검토가 필요하여 신중하게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의 규제완화처럼 법률개정 지연으로 하위법령의 정비가 순연되는 경우,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개선과 같이 타법령의 개정시 일괄 개선추진하게 되어 지연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도 공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다수의 민원성 안전 등 규제완화작업에 어려움 많아

규제완화작업을 3년 동안 추진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부 직원들은 민원해결 성격의 규제완화 안전이 많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며, 규제완화업무를 고유업무가 아닌 한시적이고 부가적 업무로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제안의 경우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사안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제도자체의 존재여부나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규제범위를 다소 축소함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점만을 해소해 달라거나 건설업 내에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처

럼 동일 산업 부문내 업종간 영역다툼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아 이것만을 위해 법령개정 등을 시행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셋째, 규제완화 추진에 있어서 건수 위주의 실적 분석, 실무자 수준에서 내용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사분석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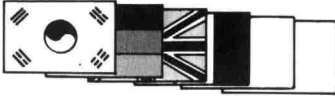
넷째, 규제완화를 위해 일단 법령을 개정한 후 다시 규제완화요구가 접수되었을 경우, 재규제완화 이후 새로운 정책방향 전환 및 법령체계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단기간 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 개별적·단편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종합적·체계적인 규제완화 추진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함과 아울러 이미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계속 점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95년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과제와 96년초 새로이 발굴된 과제를 정리하고 그 추진상황과 추진실적을 단계별로 점검하기 위하여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해당부서의 담당 직원이 이를 항상 비치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단체 등 다수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단편적인 규제완화보다는 종합적·체계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준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



# OECD의 환경정책 논의동향 : 경제와 환경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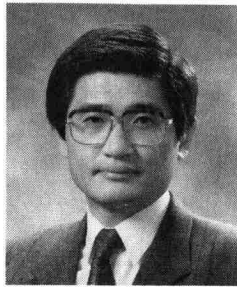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OECD의 움직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誌에서는 이 난을 통해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난은 프랑스 파리의 OECD 가입준비사무소에서 활동중인 공무원들이 집필을 담당하여 매달 생생한 현지소식을 전해주게 된다. <편집자>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앞두고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정책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음미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OECD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수립상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예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OECD 환경논의 중 경제정책 전반과 관련된 사항만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화학물질, 폐기물 관리, 오염예방, 무역과 환경, 환경과 농업, 기후변화 등의 다차환경협정 분야들은 다루지 않았다.

##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이 주요 논의과제로 등장

OECD에서 우선과제 중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주요정책 사항 중의 하나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이다. 지난 3월 21일 '물의 날'을 맞아 김영삼



정내권  
駐 프랑스대사관  
OECD 가입준비사무소 참사관

대통령이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한 5대 원칙 중의 하나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업공해나 쓰레기 처리, 맑은 물 공급대책, 대도시 대기 오염문제 정도로 생각되고 있어, 진정한 의미에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 의미하는 바가 제대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된다.

금년초에 발간된 OECD 관련보고서(*Integrating environment and Economy progress in the 1990S*, OECD, 1996. 2)는 환경보전정책과 경제개발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추구하는 것을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OECD에서는 환경정책과 경제성장, 분배, 보조금, 조세제도, 산업 경쟁력, 고용정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이유가 현재의 자유시장 가격구조가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특정 제품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비용이 제품의 제조 원가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보전되지 못하는 만큼,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함으로써 환경이 보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경제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모든 환경정책

또한 경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이 따로 구분될 수 없으며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하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책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방안으로는 시장원리를 환경정책에 적극 적용하는 경제적 수단(예를 들면,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와 같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나, 예치금 환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의 활용 또는 에너지 등 주요 생산요소의 가격에 환경오염비용을 반영하는 환경세 도입방안이 적극 분석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경제부처와 환경부가 참여한 가운데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종합적으로 통합하는 업무를 다루게 하고 있다.

### 소득세의 비중 낮추고 환경세 비중 높이는 세계개혁을 추진

이러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중의 하나로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번째로 특기할 만한 과제는 '환경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한 세제의 개혁이라고

OECD에서는,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하는 문제가 주요 정책사항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세 비중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세제개혁, 현재의 자원낭비형 소비양식을 자원절약형으로 바꾸는 소비패턴의 변화 추구,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환경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세'라고 하면 방위세나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환경세'는 목적세 성격의 한정적인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개념하에 기존의 세제가 소득을 기반으로 하여 편성되어 왔지만, OECD에서는 "오염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새로운 개념에 입각하여 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세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는 세제개혁

의 차원에서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OECD 전문가 그룹에서는 환경세의 장단점과 시행상의 예상 문제점, 전제조건 등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그간의 논의 결과를 종합한 환경세 도입 전략에 관한 보고서(*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Environmental Taxes*, OECD, 1996. 2)를 금년초 발간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은 환경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환경이 과도하게 남용이 되는 반면 노동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 실업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환경세를 도입하여 환경의 가격을 높여주고 소득세를 감면하여 노동의 가격을 낮추어 주면 환경도 보전되고 고용도 증대되는 일석이조 효과(double dividend)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 OECD에서는 이러한 일석이조 효과가 과연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계량경제학적 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제시된 일부 모델들은 환경세 도입(주로 탄소세와 같은 에너지세)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환경세제의 도입은 앞에서 설명한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위한 가격구조 조정에 있어 가

장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세금을 올리는 일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진국들로서는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으로 인해 비교적 일반 국민들의 거부감이 적은 환경세의 도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자동차 폐차세·탄소세·산화질소물세·아황산가스세 등 다양한 환경세를 도입한 스웨덴·노르웨이 등 북구 국가들이 적은 행정비용으로 오염을 보다 많이 감축하는 성과와 함께 산업구조와 소비형태가 보다 더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매우 성공적인 시행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환경세의 도입을 통해 노동의 조세 부담률(소득세의 비중)을 낮추고 오염에 대한 조세 부담률(환경세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세계 개혁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원절약형 소비패턴으로의 변화를 추구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제 중 세번째로 특기할 만한 주제는 현재의 자원낭비형 소비양식을 자원절약형으로 바꾸려는 소비패턴의 변화문제이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패턴문제는 유엔의 지속개발위원회(CSD)에서도 우선과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 문제가 OECD에서 우선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당초 소비패턴문제는 개도국들이 지구환경 오염의 책임을 선진국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92년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에 포함시킨 것이며, 당시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소비패턴의 변화가 자신들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이유로 동건 논의에 극력 반대하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리우회의후 불과 2~3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소비패턴문제를 스스로 우선과제로 다루게 된 것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아울러 환경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복지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소비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OECD는, 기존의 환경정책이 공장의 굴뚝이나 배출구에 오염처리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후 규제 또는 생산공정 자체를 청정생산공정으로 바꿈으로써 오염을 사

전에 예방하는 정책과 같이 주로 생산부문에 치중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예민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환경적으로 불건전한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제조공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한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소비부문 위주의 환경보전 개념이 환경정책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의 환경의식을 앞세운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 위주의 환경보전 방식은 생산자에 대한 처벌 위주 방식보다 행정비용이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이 정부규제에는 피동적으로 대처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패턴 변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능동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효과면에 있어서도 월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있는 환경마크(eco-labelling) 제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패턴의 변화 문제는 생산부문 위주의 환경정책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뿐만 아니라 소비행위 자체가 환경적으로 지탱 가능한지의 여부를 재검토하고 현재와 같은 에너지와 자원 과다 낭비형 생활 패턴을 자원 절약형 소비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개념으로도 다루어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자신들이 세계富有의 80%를 향유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세계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개도국의 인구가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패턴을 향유하려고 하는 경우 과연 지구의 물리적 환경 능력(carrying capacity, eco-space)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기 시작하였으며,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의 개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OECD에서는 당초 기업에서 먼저 도입되기 시작한 '생태효율성'의 개념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계·정부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 감축량을 기준으로 '생태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패턴 변화와 관련 흥미 있는 논의 중의 하나는 현

재의 소비패턴이 구매-소유-폐기방식으로 되어 있어 과잉소비, 과다 쓰레기 배출, 재활용 부진을 초래하기 때문에 복사기 리스의 경우와 같이, 소비자가 상품을 사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使用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스(lease)와 사용(use) 위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자가, 상품에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품의 내구성이 늘어나고, 정비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도 용이해지므로 소비패턴이 환경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생산자에 대한 확대책임의 개념이라든지 이미 독일에서 입법화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제조업자에 대한 '폐차회수 의무화제도' 등의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패턴 변화와 관련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소비의 낭비성 여부이며 특히 운송체계의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건전성 여부가 중점 논의되고 있다. OECD하 유럽교통장관회의(ECMT)에서는 자동차 위주의 현 운송체계의 에너지 낭비성과 매연발생 문제를 주요현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철도 현대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알프스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연을 뿜으며 알프스를 통과하는 화물 차량의 통과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해 화물 수송에 커다란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와 트럭의 매연을 줄이면서 화물을 원활히 수송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위주의 현재의 수송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철도현대화에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철도 이용률을 제고하는 것도 유용한 정책대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대형과 중형차량의 비중이 높아지고 소형차량의 비중이

### 우리의 환경정책도

산업공해 처리와 같은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지 말고 에너지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환경세제와 같은 세제개혁·고용·소비패턴·산업경쟁력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요소들과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날로 낮아지고 있는 국내 자동차 소비패턴의 '생태효율성'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환경규제 강화로 환경기술 혁신을 촉진

OECD에서 논의되는 사항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네번째 논의 동향은 환경정책과 산업경쟁력과 관계라고 하겠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기존의 시각이었으나, 이제는 환경규제가 강화

될수록 새로운 환경기술 혁신이 촉진되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환경규제의 강화를 통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도 강화시킨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각종 환경 기준을 완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였는데, 오늘날 미국 경제가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환경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의 질에 있어서도 일본과 독일에 뒤떨어지게 된 결과를 낳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에너지 값, 특히 매연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디젤가격이 국제가격에 비하여 낮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의 우리의 산업 환경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정부가 95년 10월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으로 전환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친화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다든지, 95년 6월 발표된 「21세기 환경 비전」에서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든지 하는 반가운 보도가 있었지만, 95년 7월 공해배출시설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규제 조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는 완화되오 오염배출에 대한 환경규제는 오히려 강화하여야 한다는 OECD의 논의 방향과는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가격을 올림으로써 첨단 환경기술과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환경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수익성이 높다면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이다.

## 우리의 환경정책도 주요 거시경제요소와 연계시켜야


이상에서 살펴본 OECD의 선진환경정책 동향을 우리의 상황에 대입시켜 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는 더 이상 환경정책을 산업공해 처리와 같은 좁은 범위에 국한시키지 말고 에너지 가격구조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환경세제와 같은 세계개혁·고용·소비패턴·산업경쟁력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 요소들과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 93년 백악관내에 '지속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장단기 경제정책에 환경정책을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문제가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등의 경제부처와 환경부 간의 주요 공동 정책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살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환경비용을 반영한 가격 구조조정(예:디젤가격 인상)과 같은 선진환경정책을 도입할 수 없다고 체념할 수는 없다. 더욱이 향후 10년간 총 6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21세기 환경 비전」의 실현을 정부예산 33조, 민간기업 27조원으로 총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금 조성에 있어서도 오염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가격구조 조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맑은 물 공급대책도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제가격에 비해 훨씬 낮은 수돗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보다 좋은 질의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인 성과가 증명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환경의식을 활용한 소비측면의 환경정책이나 자원절약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환경세 개념에 입각한 세제개편,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환경기술 개발 촉진,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한 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매연감소 등도 우리 실정에 맞게 시급히 검토하여 우리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가 왔다고 하겠다.

우리가 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당초 서방민주진영의 시장경제 동맹체로 출범한 OECD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제경제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OECD의 관련 논의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든지 또는 서방민주진영의 보루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외교 안보 기반이 강화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위에서 예시적으로 살펴본 환경정책의 경우와 같이, OECD가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책의 선진화와 합리화에 유용한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우리 OECD 가입의 진정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 경제상식

### • 해외증권

국내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 증권시장에서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해외증권은 주식연계 증권과 주식비연계 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연계 증권으로는 轉換社債(OB), 新株引受權附社債(BW), 株式預託證書(DP)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주식과 연계되어 있어 일정 기간 후에 이들 증권을 소유한 외국인도 국내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식비연계 증권이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되는 증권을 말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주식비연계 증권으로는 양키본드(Yankee bond), 사무라이본드(Samurai bond) 등을 들 수 있다.

# 김 인 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담 : 이규익/산업연구원 원장

• 때 : 96년 4월 10일 • 곳 : 공정거래위원장 접견실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간접적인 총량규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집단체열시간 부담한 내부거래 등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대한 규제는 경쟁촉진적 관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관급기관으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초대 장관급 위원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는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제질서의 파수꾼으로서 경제 구석구석에 경쟁을 도입하고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경쟁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의 주무당국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는 크게 법위반사건에 대한 심판업무와 경쟁정책을 경제사회 각 부문에 확산시키는 정책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 이번 위상강화를 계기로 정책업무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쟁정책은 금융·세제·산업·통상정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정책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련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제도는 중소기업 보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 쪽에도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촉진과 중소기업 보호는 부분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 말씀하신 대로 공정거래제도는 본래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며 중소기업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나 비계열사와의 차별적 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 등은 엄격히 감시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대규모 기업집단이 과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정책당국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우리 경제의 개방화·자율화가 크게 진전되고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또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집중 문제를 위시하여 경쟁정책의 과제와 방향이 국제적 시각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각 부처의 산업정책 중에는 대기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이들 정책들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과의 사이에 일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문제와 관련한 대기업정책도 경제환경의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등으

로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낮아지고 기업활동이 세계화됨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한 경제제도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OECD 등 국제기구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경제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이며, 경쟁정책도 국제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선진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 경쟁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경쟁저해적 제도를 경쟁촉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외개방과 경쟁확대에 따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나 산업정책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력집중 과제는 30여년간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누적된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로서 제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간접적인 총량규제는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특히 기업집단내 계열시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 경쟁제한적인 행태에 대한 규제는 경쟁촉진적 관점에서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다 시장기능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전적인 규

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제 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듯이 소비자안전을 위한 길이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적 기능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안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면서 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꺾지 않는 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한편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기업민영화·금융산업개편 등 정부의 여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부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을 포함한 대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이상적인 모습에 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행태에 대한 직접적·사전적 그리고 미시적 규제는 가급적 완화하고 기업의 행태를 바람직하게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자적 기능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심판자·감시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비자보호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과거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시절 소비자보호법을 만드는 데 산파역을 한데다



대답자 **이규업** 산업연구원(KIET) 원장

1945년 출생.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조교수를 거쳐 75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부원장으로 근무하였다. 95년 3월 이후 산업연구원(KIET)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법경제연구」, 「기업결합」, 「산업조직론」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원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업무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착과 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적 시장경제란 기업과 기업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도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경제활동의 최종목표는 풍요로운 소비생활에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는 사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소비자보호란 단순히 잘못된 상품을 교환해 주는 소비자불만 처리와 같은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법 진입규제, 시장개방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생산자를 먼저 고려하느냐 소비자를 먼저 고려하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선택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주무당국으로서 진입제한, 사업자수 제한, 가격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금년에도 통신·에너지·유통 등 경쟁제한 요소가 많은 분야의 본질적인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니다.

또 각 부처가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이나 처분을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정착시키고 경제활동 전반으로 경쟁기반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사회구조나 의식 등 많은 부분이 생산자 위주로 되어 있어 소비자보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 위주로 과감하게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안전,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거래질서의 확립, 사후적 피해구제 등 각 부문별로 행정시스템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소비자보호국이 신설된 것을 계기로 적어도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래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부문에는 아직도 진입장벽과 경쟁제한행위 등이

많이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경쟁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규제완화 작업에 주무당국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규제완화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체계가 규제완화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고 그 내용도 절차 간소화 등에 치우쳐 있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접근이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의 주무당국으로서 진입제한, 사업자수제한, 가격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금년에도 통신·에너지·유통 등 경쟁제한 요소가 많은 분야의 본질적인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기업과 소비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경제환경이 바뀌어 각 산업에 대한 보호·지원·규제 등을 위한 사전적 정부의 개입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정부는 결국 경기규칙을 운영하는 심판자 기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주체인 기업들이 게임의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창의와 노력으로 공정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업계에서 공정경쟁의 취지를 심분 이해하여 공정거래법의 자율준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소비자들도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주저 없이 신고하는 감시자 기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원**

**중** 소기업청이 개청된 지도 3개월여의 기간이 지났다. 개청행사·협의회·간담회·대책회의 등등 나름대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940명 전직원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서 자신의 몫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3년말 광공업 통계 기준으로 제조업체수의 98.9%, 제조업 고용의 68.9%, 생산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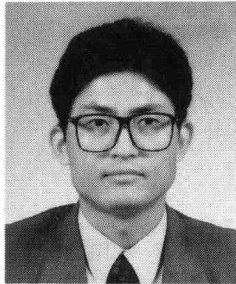
##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병원, 중소기업청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지는 몰라도 2월 중소기업 부도율은 0.14%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도 중소기업청 설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중소기업청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었다고 기상천외하고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당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은 기존 중소기업정책에 살을 붙이고 현장과의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중소기업정책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청 설립에 거는 우리 중소기업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일관된 정책목표에 따라 종합적·체계적으로 집행

중소기업을 흔히 산업경제의 뿌리에 비유하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70~80년대의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에서



송재희  
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장

그러나 경제적 공헌과 국민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내지 존립기반은 크게 개선되거나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30.3%, 생산이 11.9%, 경제성장률이 9%를 상회하는 등 호황을 구가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경기가 동반적이지 않고 상반적인 경기양극화현상을 보임으로써 중소기업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커졌다.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자금난과 인력난,

기술부족 등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개방의 가속화 및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구조조정 속도가 느린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건설업, 유통 및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부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무려 1만4천여개 기업이 부도를 내어 하루 평균 40여개의 기업이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의 화려함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었던 중소기업 문제가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중소기업계를 포함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금년을 중소기업 회생의 元年으로 삼

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어 중소기업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다음과 같은 배경 아래 출범하였다.

첫째, 다기화된 중소기업 관련정책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일관된 정책목표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금융·세제지원은 재정경제원이 맡고 있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작업환경 개선은 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입지안 완화는 건설교통부가 총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정부의 거의 전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하나하나의 개별 법규를 이해하기도 힘들지만 상호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찾기도 어려워 반찬은 많으나 막상 먹을 것이 적은 것과 같았다.

중소기업지원제도도 수십 가지에 달해 금융 및 세제지원, 자동화, 정보화지원, 창업지원, 인력확보, 판로확보, 경영지원 및 대기업과의 협력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이 개발되고 집행되었지만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제도의 한계에 의해 그 실효성이나 효과는 기대수준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둘째, WTO 출범에 따른 국내 시장개방 및 공정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막이 대폭 걷히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방향선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공산품의 관세율이 계속 떨어져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세제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마저 98년(개도국은 2000~2003년)까지 대폭 축소될 예정이고,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기술력과 환경대응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셋째, 그동안 중소기업정책 전담부서의 설립을 갈망해 왔던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전향적으로 반영되어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미국은 1953년부터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을 설립하여 약 4천명의 직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일본도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청을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하도급거래 적정화 등 공정거래정책의 수립,

**중소기업청은, 다기화된 중소기업관련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체계적인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요구와  
WTO 출범에 따른 시장 개방 및 국제경쟁에 대비한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방향 전환의 필요성, 또한  
중소기업정책 전담부서를 갈망해 왔던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전향적으로 반영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경영진단 및 지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다.

선진국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여과하여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정책목표를 수립 시행하기 위한 종합병원의 설립을 우리 업계가 열망해 왔던 것이다.

#### **‘중소기업지원 4대 기본방향’ 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이처럼 중소기업청의 탄생배경이 지닌 경제적·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중소기업청이 해결해야 할 역할 또한 막중하다 하겠다.

중소기업청은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지원 4대 기본방향’ 하에서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제환경 및 국제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무분별하고 획일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장가능성이 있고 노력하는 중소기업 위주의 선별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을 위한 열린 관청, 서비스 관청으로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함으로써 행정편의적이고 획일적인 제도시행으로 인한 개별법체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자 한다.



##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4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먼저 성장가능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상의 경영애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금난 완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개청 이후 1일평균 250여건의 민원상담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금관련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계 전문가 4명을 파견받아 '자금지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과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3월 7일 개최된 제1차 금융지원협의회에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 및 신용대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전담은행의 부도방지특별자금 지원규모를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도처리시는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하며, 소요운전자금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부도방지 대책을 보완하였다. 또한 상업어음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

도 전면 개편하여 부도방지대출 위주로 운영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기능을 강화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은행이 공동 마련한 중소기업 신용평가모델 표준안을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받은 업체의 신용보증제재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운영키로 하였다.

한편, 우수기술보유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하고, 중소기업청이 추천하는 신기술보유 우수기업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대상으로 추가키로 하였다. 아울러 재보증 등을 통한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금융지원협의회의 운영성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어, 4개 지방청 및 7개 지방사무소에서 지역별 금융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애로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구조개선자금을 당초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증액하고 소진상황을 보아 2조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촉진함과 아울러 향후 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94년부터 정부의 지원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성자금을 연계하여 15개 시도별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96년에는 조성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8천억원을 장기저리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의 공업단지 특별지원지역으

로 지정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국비와 지방비 연계비율을 70:30으로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 지원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도록 하여 중소기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경영자의 의식전환을 위해 최고경영자·중간관리자 등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전국 14개 지역에서 경영혁신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현장기술자에 대한 기술혁신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중소기업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 지역별로 연수원 건립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경기도 시화공단내에 대지 9천평, 건평 3,837평 규모의 자동화센터를 4월 3일 개원 완료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지도, 자동화시스템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0PPM 품질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0개 표본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중간관리자 및 실무추진자 등 7천여명에 대해서는 교육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의 고급 기술인력(공학박사 87명)과 최신첨단장비(8,300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EM·NT 마크 획득제품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고, TV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 중소기업 전용백화점 건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유통업 지원 및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지원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유통업·서비스업 등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전체의 균형된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유통업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12.7%, 고용인구의 24.4%를 차지하는 등 높은 국민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중소기업지원 4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사급한 인력난 해소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규제의 완화 및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할인점, 창고형도·소매점 등에 의한 가격파괴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96년1월부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외국 유통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되어 중소기업유통업체의 상권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재개발, 소규모점포의 시설현대화, 공동창고 건립 등 중소기업유통업 구조개선사업에 1,900억원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유통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무자료거래의 근절,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상권확장제한 등 유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경영현대화를 위한 시범점포모형을 개발 보급하며, 중소기업전담은행을 지정 운영할 계획에 있다.

또한 금년중 외국인 연수생 2만명의 추가도입,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개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고, 중소기업 창업 절차의 간소화, 창업보육센터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자의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기관 역할 수행

중소기업청 전직원은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의식쇄신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탁상행정·권위주의를 탈피하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청(소)을 포함하는 전직원 연찬회를 96년 3월 16일~17일 개최하여 봉사행정·심부름행정·현장밀착행정·확인행정 등의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토요일 격주휴무시에는 중소기업현장 방문의 날로 정하여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중소기업인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지원해 주는 현장밀착형 중소기

업지원시책을 적극 펴 나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전직원을 상담요원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1인1사 후견인제를 도입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전담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이밖에 지방중소기업들이 현지에서 금융·경영·기술·인력·창업지원 등 각종 행정 및 기술·정보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99년까지 15개 시도에 1개소 이상 설립하여 윈 스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행정규제 완화 및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시행할 계획이다.

쇄도하고 있는 민원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업종별 간담회·협의회·대책회의 등 각종 회의시 건의내용 등을 수집·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법규 및 제도·관행 등의 타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정부부처, 금융기관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받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70~80년대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의 보호 측면이 강조되어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의 중소기업정책은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주체로서의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3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현금결제 확대와 어음결제기간 단축을 유도해 나가고, 대금결제 및 거래관행을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금년 들어 대기업들이 수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전·시설자금 등 자금지원 확대, 환경·경영진단 등 기술 및 경영지도 강화,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증대 등 다양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불량률 감소, 품질개선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강화시

켜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확보에도 주력

중소기업청의 설립목적 중 하나는 각종 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에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의 많은 정책들이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정책 수립과 집행의 괴리, 현장감의 결여 등이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중소기업청은 11개 시도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정책집행의 점검기능과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여 각종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본청의 조직을 보더라도 기능국과 업종국이 상호 보완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는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부서특성에 따라 행정직과 기술연구직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위한 행정 및 기술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수립시 업종별·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사전에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청 설립에 거는 중소기업인의 여망에 부응토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남정세**

의식개혁 따로 없다  
내가 먼저 바른척신

**지** 금 세계는 동서 냉전체제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교역뿐만 아니라 국가간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추구하게 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현상이 보편화되고 있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제조업이 주도하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산업이 주도하는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해서는 컴퓨터·통신·반도체·방송·무선·위성·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첨단 기술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우리나라도 초고속정보통신 기

#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선도시험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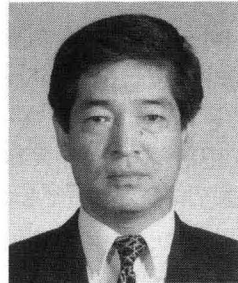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EU·NAFTA·ASEAN·AFTA 등 경제의 블록화가 활발히 진전되는 등 본격적인 경제전쟁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은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면서 인류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공산품 생산력이 경제력을 좌우하는 시대에서 정보자본이 국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 초고속정보사회의 보다 빠른 진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산업화에서는 선진국에 뒤졌으나 초고속정보화에는 선진대열에 동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을 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은 음성·문자·화상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정보를 양방향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첨단 통신이다. 이를 위



**김용준**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  
기술개발반장

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련기술개발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험환경조성사업으로 선도시험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인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초고속정보통신 선도시험망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개발로 정보화시대에 부응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정보화가 촉진되면서 미래는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국가·산업체·국민 개개인 등 인류사회에 정보통신 서비스의 요구가 매우 다양해지는 등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초고속정보사회에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관련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응용서비스 및 제품 경쟁력을 초고속정보통신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응용서비스 및 핵심기반 기술을 도출하고,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을 발굴·개발하여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선진국에서의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장벽 강화 및 시장 개방압력이 한층 가중되고 기반기술 부족에 의한 기술종속이 예상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개발 및 환경구축, 표준제정 등의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선진국은 국가주도로 기술개발에 총력

미국은 인터넷 기술과 정보통신망에 기초한 HPCC (High Performance Computer & Communic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초고속정보통신 관련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핵심전략기술 확보와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장기적인 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서비스 확산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S/W 및 영상정보를 중심으로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정보통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제패하기 위해 AT&T·IBM 등 세계 최고수준의 민간연구기관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통신 프런티어 개척 및 인간에게 친숙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을 추월하기 위해 국가주도로 정보통신기반 계획을 추진하되 광케이블망 정비 등 사업추진은 민간주도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럽은 美·日에 대응하기 위해 EU내 기술개발 및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유럽연합 공동연구체제를 강화하여 서비스 기반을 위한 객체지향형 개발환경 구축, 통합 서비스공학 연구, 사용하기 쉬운 서비스 인터페이스 제공 등 통합된 초고속기반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올해 기술 및 연구개발사업에 2,080억원 투자

국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기초·기반·핵심기술의 개발과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추진, 95년에 1,166억원을 투자하였고 올해 2,0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의 구체적 내용은 광대역정보통신망(B-ISDN), Gigabit통신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은 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사업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현재는 우선 제1단계만 초고속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추세를 감안 구체적인 개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의 목표는 實時間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관련 응용기술 개발, 초고속기반 구축에 따른 안정성 대책 수립 및 기술개발, 제2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선행기술 연구이다.**

기술, 위성통신망기술,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개인휴대통신(PCS) 및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기초기반기술, 무선멀티미디어기술, 광전달망기술 등 통신기술과 소자·컴퓨터 등을 개발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산업계의 공통애로기술·중기거점기술 등 기반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산업 진흥과 직결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차세대반도체 개발, 반도체장비 국산화, 고선명TV용 주문형반도체 등 반도체기술과 전자시스템 등이다.

과학기술처는 정보통신관련 S/W 분야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하였으며, B-ISDN 등의 G7프로젝트사업을 타부처와 공동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과의 기술적인 격차를 살펴보면, 정보전송기술에서 교환기술·전송기술·네트워크 기술은 2년 정도이고, 무선통신기술은 디지털이동통신(CDMA) 상용기술에서는 최고수준이나 대체로 1~5년 정도이며, 위성통신은 발사체를 제외하고는 1~5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정보응용·정보유통기술에서 컴퓨터기술은 2~5년 정도, S/W·D/B기술은 1~3년 정도이며, 공통 기반기술의 경우 소자·부품기술에 대체로 1~10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민간참여를 촉진하여 핵심전략기술을 조기에 개발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발전 동향 및 추세를 장기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또 가시적으로 당장 수요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므로 제조업체·S/W업체 등 민간 산업체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저한 기술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아울러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을 주도할 핵심전략 기술을 조기에 도출하여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국내시장은 자칫 외국의 방대한 영상정보 및 게임 등의 응용 S/W에 의해 잠식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서둘러 우리 실정에 맞는 응용 S/W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에 따른 역기능 예방 및 방지 대책과 통신망간 접속규격 등의 표준제정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할 수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 환경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 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 및 개발체계 확립

초고속정보통신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의 기본방향은,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국내 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 및 개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급변하는 기술발전예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동향 분석과 중·장기 기술예측으로 종합적인 기술개발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기술분야별 선행연구 추진으로 주요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넷째, 21세기 미래 정보통신산업을 주도

할 첨단기술의 조기 도출 및 가능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표준규격 연구와 이의 국제표준 채택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섯째, 초고속기술의 개발 촉진과 시험 및 검증을 위하여 선도시험망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연구관리단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연구소는 핵심기반기술 개발, 통신사업자는 초고속정보통신시스템 개발을, 산업체는 상품화기술, 학계는 기초기술 및 요소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제1단계에서는 實時間 멀티미디어서비스 등을 개발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은 95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사업기간을 97년까지 제1단계, 2002년까지 제2단계, 2010년까지를 제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우선 제1단계만 초고속기술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및 추세를 감안 구체적인 개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제2, 3단계는 급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추후 수립할 예정이다. 제1단계 목표는 실시간 멀티미디어서비스 및 관련 응용기술 개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따른 안정성 대책수립 및 기술개발, 제2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선행기술 연구이다.

제1단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실현을 위한 창의력 발굴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추진한다.

둘째, 이용자 중심의 초고속기반구축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21세기 초고속정보사회의 비전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 초고속 서비스구조 및 기반망 구조 모델을 정립하고, 제2단계 국가전략기술을 도출한다.

셋째, 쫓아가는 기술개발에서 앞서가는 기술개발을 위해 21세기 미래를 향한 초고속 선행기술연구를 추진한다.

넷째, 초고속망에서 신뢰성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안전성 확보방안의 제시와 이를 지원하는 안전성모델과 프레임워크, 핵심기술의 개발을 추진한다.

## 선도시험망 구축으로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조성사업 지원

선도시험망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제반기술 즉,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직접 관련된 기술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증을 지원하는 시험망으로서의 개념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될 응용 서비스와 관련 이용기술의 개발 과정 및 결과를 확인·검증·평가하는 데 제공되는 시험망으로서의 개념을 지닌다.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과 새로운 첨단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의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국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여 제공하는 망으로서 첫째, 초고속정보통신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첨단 시험환경을 조기에 확보하여 제공하고 둘째, 국내외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産·學·研 공동연구 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셋째, 선도시험망의 구축·운용을 통해 본격적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용 관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선도시험망 기술개발의 추진으로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기술동향 분석과 종합적인 기술개발전략 및 계획 수립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응용서비스 및 관련 응용기술의 조기 개발로 외국의 방대한 영상정보 및 게임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로부터의 공세에 대비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초고속사업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초고속선도시험망 사업의 추진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의 발전순기에 따라 구현 가능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망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기에 최고의 시험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운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선도시험망의 구축 및 운용은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담당케 하되, 이는 통신망 구축 및 운영경험이 풍부한 기관 중에서 선정할 것이다.

셋째, 다양한 의견수렴 및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선도시험망 이용자간의 협의회 운영, 세미나 개최, 각종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선도시험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넷째, 선도시험망의 광가입자망 구축은 여건상 초고속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경제적으로 개발환경을 구축하고 많은 기술개발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한 공동이용센터를 전국 주요도시에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구축하여 제공할 것이다.

다섯째, 위성통신·이동통신 등의 무선통신망 및 해외시험망과의 연계 등으로 다양한 시험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전담기관으로 한국통신을 선정하여 서울과 대전 간 선도시험망 및 공동이용센터 등을 구축하여 운영중이며 지속적으로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것이다.

### 3단계로 선도시험망 구축하되

올해에는 이용자 늘려 관련기술개발 참여 유도

제1단계(95~97년)에서는 서울과 대전에 2.5Gbps급 광케이블 전송시스템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용량 정보교환이 가능한 ATM교환기를 설치하여 기간시험망을 구축할 것이다. 기간망에 접속되는 가입자망은 이용기관의

요구를 검토하여 155Mbps급으로 구축하되 초기에는 서울과 대전 지역의 초고속관련 기술개발 기관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개발자를 위하여 공동이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타지역의 주요도시에도 공동이용센터를 설치, 시험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2단계(98~2002년)에서는 서울과 대전간 기간전송로를 당시에 구현 가능한 최고 속도로 고속화하고 이용자 접속속도는 이용기관의 요구에 따라 622Mbps급의 속도까지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센터의 시설을 보강할 방침이다.

제3단계(2003~2010년)에서는 서울과 대전간 기간전송로를 지속적으로 고속화(Tbps급 예상)하고 이용기관의 요구속도를 제한없이 수용할 수 있는 접속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선도시험망은 95년 7월 13일에 서울-대전간 2.5Gbps 기간망의 개통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95년말에는 대학교·연구소·기업체 등 35개 기관에 광선로를 포설하여 선도시험망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96년 2월부터 서울대와 충남대에 공동이용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96년 3월부터는 서울KAIST와 대전KAIST에도 공동이용센터가 설치완료되어 운영이 시작되었다.

96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연구시제품인 ATM교환기를 표준안에 따른 고기능 ATM교환기로 대체하여 훨씬 안정적이고 고기능의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이용센터 6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보다 많은 기술개발자들이 선도시험망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초고속 관련장비의 개발·시험을 지원

위와 같은 기술개발의 추진으로 나타나는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기술동향 분석과 종합적인 기술개발전략 및 계획 수립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응용서비스 및 관련 응용기술의 조기 개발로 외국 의 방대한 영상정보 및 게임 등의 응용 S/W로부터의 공 세에 대비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초고속사업에 대한 관심과 마인드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21 세기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할 첨단기술에 대한 조기 도출 및 이에 대한 상세개념정립으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

는 기술개발이 추진될 수 있고, 초고속기반구축에 따른 정보보호·표준화 등의 제반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여 대비함으로써 기반구축시 예상되는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초고속기반기술 개발을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기술개발 인력이 효과적으로 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도시험망의 주요 활용은 HAN/B-ISDN 연구개발 사업과 같은 초고속관련장비의 개발·시험을 위한 지원으로,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등 10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장비개발자를 발굴하여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5년에 선정되어 개발하고 있는 186개 응용기술 개발자를 위하여 개별기업자로 25개 기관을 연결·지원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공동이용센터를 활용케 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이용센터를 증설 또는 확장하여 보다 좋은 환경을 기술개발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선도시험망을 해외시험망·무선망·위성망 등의 타시험망과 연결, 공동연구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이다.

선도시험망 및 초고속정보통신기술 개발의 유기적인 관계로 개발된 기술은, 향후 초고속국가망·초고속공중 망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망의 구축뿐만 아니라 초 고속 응용서비스의 수요가 창출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 시대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산업체·학계 등의 지속적인 총체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남원**

**허리속인 봉사정신  
일어서는 국민경제**

**상** 수도시설은 국민생활과 생산활동을 지탱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로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사회간접자본이다. 인구증가,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수도물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상수도시설 부족과 상수 취수원의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은 한층 더 어려

수준의 급수량을 보이고 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

그동안 상수도 보급정책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되어 도시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7.4% 수준으로 향

# 맑은 물 공급 위한 상수도 확충계획

운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94년말 현재 844개 정수장에서 654개 급수지역에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2만 6,683개의 간이상수도 와 전용상수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수도시설수의 최근 변화추이를 보면 지방상수도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나, 특별·광역시 및 시급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정도의 미미한 변화이고 새로운 수도사업의 증가는 거의 없으나,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에서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보급 불균형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수도 보급률은 84년 70.0%에서 94년말 현재 82.1%로 10년 동안에 12.1%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개 특별·광역시의 평균 보급률은 98.5%이고, 도의 평균 보급률은 67.1%로서 제주도가 99.9%로 가장 높고, 충청남도가 42.1%로 가장 낮다.

급수량의 증가 추세를 보면 61년에 1일 1인당 급수량이 102 l에서 87년에 311 l로 26년 동안 세 배가 증가하였으며, 94년말에는 전국 평균 408 l로 이미 선진국



**류지영**  
환경부 상수도과장

상되었으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56.7%, 농어촌 지역은 34%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들 지역은 조그마한 가뭄에도 제한급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많고, 특히 농어촌 주민의 66%는 수질이 불량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간이상수도 및 공동우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읍급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민과 동일한 양질의 풍부한 수도물을 공

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도서지역의 항구적 가뭄해소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대도시 주변의 광역상수도 와 농어촌 지역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시·읍급 중소도시 지방상수도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하고 있어 시설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6년부터 2005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64개 시·읍 지역을 대상으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의 50%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하는

등 8,380억원을 투자하여 중소도시 지방상수도를 연차적으로 확충, 780여만명의 주민들에게 가뭄시 생활용수난 해소와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95년도까지 농어촌특별세 재원에서 670억원을 투자하여 31개면 지역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2004년까지 농어촌 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 4천억원(농특세 지원 50%, 지방교부금 50%)을 투자하여 전국 215개 농어촌 지역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자연마을 중 시장·군수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에 수도물을 공급하여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농어촌 부락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67년부터 94년까지 총 1,018억원을 투입, 3만5,533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그동안 상수도 보급·시설노후 등으로 일부시설이 폐쇄되어 94년말 현재 총 2만6,363개소로 전국 인구의 8.4%인 380여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는 부락이장·부녀회·유지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91년 12월에 「수도법」을 개정, 시장·군수가 관리토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 인력·재정능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소홀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81.4%이며 표본추출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27.1%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문제가 있어 8,656개소는 시급히 개량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상수도 보급지표

	92년	93년	94년	96년	2001년
총인구(천명)	44,569	45,077	45,503	45,819	47,761
급수인구(천명)	35,639	36,568	37,351	38,488	42,507
보급률(%)	80	81.1	82.1	84	89
시설용량(천t/일)	18,787	20,093	20,967	21,745	26,761
1인당급수량(l/일)	385	394	408	415	438
급수지역(개소)	585	625	654	670	720

**정부는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수도물 유송과정에서의 수질 저하를 방지하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하며, 용수요요 저감정책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95년에 「간이상수도 정비지침 및 관리준칙」, 「간이상수도 표준모델 및 관리요령」 등을 제정·시달하고, 간이상수도 전담공무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96년에는 개량이 필요한 간이상수도 8,656개소에 대한 중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5,159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의 시설을 개량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는 3,151개의 섬이 있고, 이 중 475개 섬에 26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섬 지방은 지역 특성상 수원을 확보할 적지가 없어 간이상수도 또는 빗물을 받아 생활용수로 사용하므로 조그마한 가뭄에도 급수난을 겪게 되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다. 이러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96년도에 도서지역 급수대책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21개 중심도서에 식수용 저수지를 건설, 인근도서에 상시 운반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저수지를 건립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해수 담수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식수원개발 사업으로 1,500억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수도물 유송과정에서의 수질 저하를 방지**

정수장에서 양질의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더라도 낡은 수도관이나 저수조 관리 부실로 인하여 水道栓에서 녹물이 발생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되어 국민들이 수도물을 불신하고 정수기나 생수를 구입하는 데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고 있으며, 유송과정에서 19.2%의 물이 누수되어 불필요

한 정수장 확장 등으로 수도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수도물 유송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방지하고,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총 10만3,422km에 달하는 수도관 가운데 노후관 2만434km를 97년까지 교체하기로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50%를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등 총 1조 5,557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불량 수도기자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상수도시설개량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낡은 수도관의 교체를 계속적으로 추진, 국민들의 수도물 불신을 해소하고, 누수율을 2001년까지 12%로 낮추어갈 계획이다.

저수조는 단수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수량을 확보하고 시간대별로 변하는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데, 95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14만4,38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저수조가 구조 및 재질불량, 청소 등 관리소홀로 수도물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됨에 따라 저수조를 처음 설치할 때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와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저수조설치기준」과 설치후 청소 및 위생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또한 94년 하반기부터 저수조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에 대하여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연2회씩 시·군 합동으로 저수조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96년에는 401개 청소업체 728명, 관리자 8,343명을 교육할 계획이고, 교육내용도 강사진을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실무교육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저수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물을 저수기능 없이 직결식으로 급수할 수 있는 수도 직결식 급수체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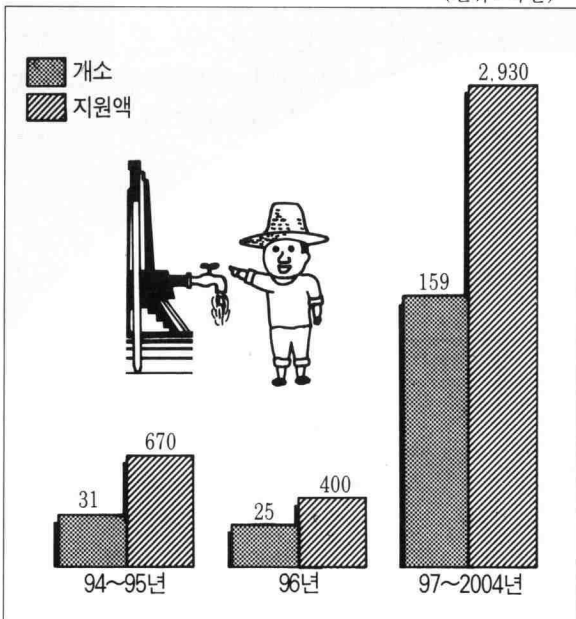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수질을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한 구역을 말하며, 취수구 상류의 수면과 인접토지를 포함한다.

95년말 현재 전체 취수장 808개소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수장은 407개이며, 보호구역수는 386개소이다. 미지정 취수장수는 401개소로 주민의 반발로 인한 곳이 27개소, 지정 추진중인 곳이 15개소이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제한이 가해지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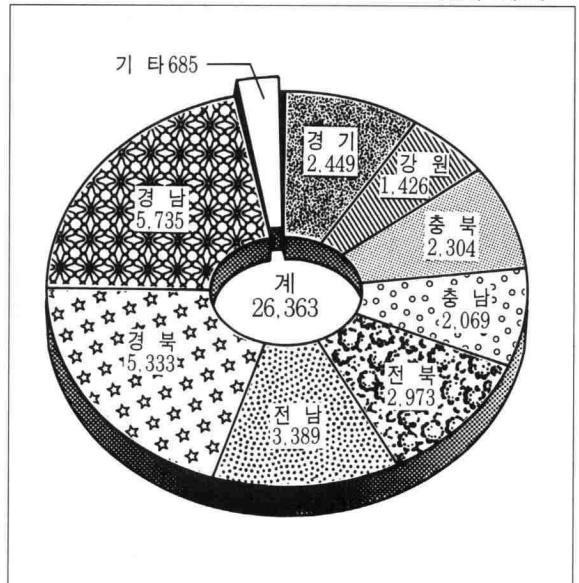
〈그림 1〉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계획

(단위: 억원)



〈그림 2〉 농어촌 간이상수도 현황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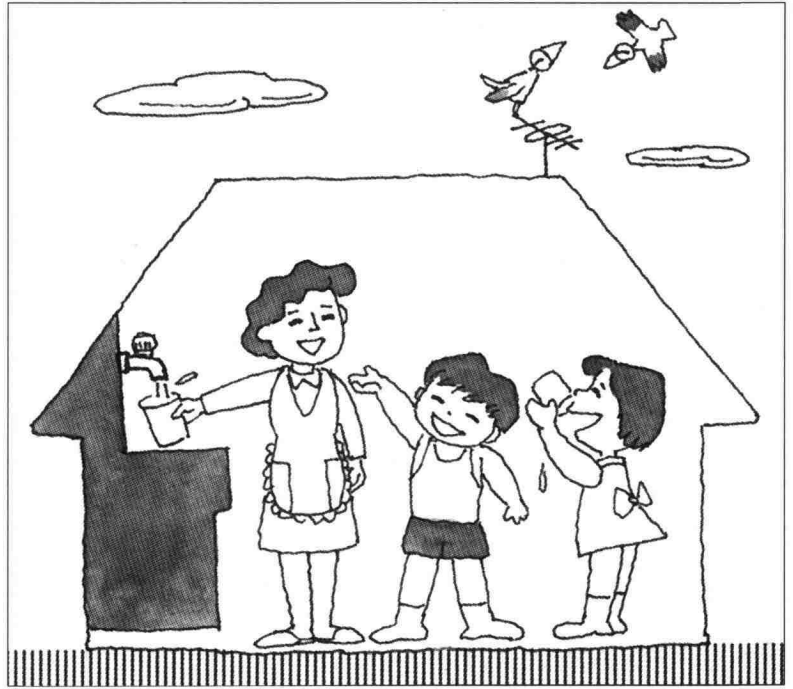


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항의 및 민원 빈발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며, 급수지역과 보호구역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보호구역관리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부담 등으로 관계시·군간 갈등이 발생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현재 추진중인 15개 취수장에 대해서는 조기지정을 추진하고 주민반발 등으로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27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 실시 및 상수원보호의 필요

성을 홍보하여 주민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산간벽지 등에 대해서는 음식·숙박시설 등이 점차 입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지정기준의 개정을 검토하며, 이미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상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깨끗한 상수원수의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보호구역 지정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보호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제도를 도입하여 9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당해 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당해 구역에서 주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농기구수리시설·생산물저장창고 등 소득증대사업, 간이급수시설·도서관·통학차 등 복지증진사



업 및 교육기자재, 학자금 등 육영사업 등을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70%와 국고보조 30%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출연금 = 연간원수취수량×정수단가×출연비율 0.03%).

96년도에 1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차로 상반기중에 35개 상수원보호구역에 94억4천만원으로 농로 확·포장, 유기영농 지원, 농업용수로 개선, 한봉단지 조성 등 10개 소득증대사업에 53억원, 마을단위정화시설, 하수도정비, 간이급수시설, 마을회관 등 12개 복지증진사업에 32억원, 학자금지원 등 육영사업에 3억5천만원, 주민이주비에 5억8천만원이 지원되며, 특히 팔당댐 상류지역 4개 시군(남양주시·광주군·양평군·하남시)에 전체 사업비의 66%, 대청호 상류지역 3개 시군(대덕·청원군·보은군)에 7.1%가 지원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여 이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소득증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민들은 손해가 없고, 하류지역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표 2〉 연차별 노후수도관 개량계획

(단위 : 억원, km)

	~94년	95년	96년	97년	전 체
사업비	6,594	3,353	2,600	3,010	15,557
(융자금)	(2,000)	(1,200)	(1,300)	(1,505)	(6,005)
노후관개량	8,304	4,685	2,591	4,854	20,434

## 정수장 등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개선하고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

현재 전국에는 정수장이 844개소, 배수지가 1,492개소가 있으나,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정수시설이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깨끗한 수도물의 생산·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도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0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정수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96년부터는 환경부·환경관리청·환경관리공단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수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지원비용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정수장 근무요원에 대한 수당인상·포상 등 사기양양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후 5년 이상된 정수시설에 대한 정밀기술진단을 실시, 정수장 및 배수지의 운영을 개선하여 맑은 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발전으로 새로운 유해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증가로 상수원 오염이 가중되어 일부 정수장에서는 고도정수처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94년초 발생한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유역특성상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으로 원수 수질이 나쁜 한강수계 3개소, 낙동강수계 12개소, 금강수계 2개소와 영산강수계 1개소 등 모두 18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3,493억원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하여 98년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국내기술 축적이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고도정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30명으로 '고도정수처리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규모 및 설치시기, 고도정수처리공정의 최적모델, 처리공정의 조합 및 배열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있다.

## 용수수요 저감정책으로 수자원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

인구의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국민 1인당 용

정부는 시·읍급 지방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도 도시민과 동일한 양질의 풍부한 수도물을 공급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도시지역의 항구적 가뭄해소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미 90년부터 물부족국가로 전락하였고, 물공급예비율도 현재 7.9%에서 2006년에는 1.4%로 떨어질 전망이지만, 대규모댐이나 저수지 건설 등 용수공급 확대정책은 건설적지의 감소,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한 건설비의 상승,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용수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통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용수수요 저감정책은 용수공급 확대정책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부수적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다. 전국의 수도물 사용량(1,523만t/일)을 용수수요 저감정책을 통하여 10%를 절약하게 되면, 그 양은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양(159만3천t/일)과 거의 같으며 생산원가(349원/t)로 환산하게 되면 10만t/일 규모의 정수장 10여개를 건설하여 약 300만명에게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약1,940억원이라는 예산이 절약되며, 그 밖에도 하수발생의 감소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절감, 자연환경의 보존, 물공급예비율의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축관계법규를 개정하여 96년 1월 6일부터 신축하는 1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절수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절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용수수요를 관리하여 왔다. 앞으로 정부는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도 절수형 수도용구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쓰고난 물을 재사용하는 중수도의 도입, 기본적으로 저렴한 수도요금을 절수유도형 요금체제로 개선하는 등 용수수요의 저감을 위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재**

**해** 마다 봄철이 다가오면 우리 산업현장은 임금교섭으로 아연 긴장하게 된다. 경영실적이 좋은 회사는 회사대로, 적자가 난 회사는 그 나름대로 고민에 휩싸이게 된다. 노사가 각기 자기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요즘은 조금은 잦아들었지만 임금과 관련하여 분규를 겪기도 하였다.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섭준거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교섭준거는 중앙노사단체간 합의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부는 그동안 노·경총에 합의의 성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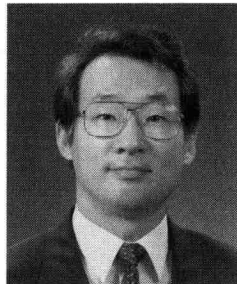
## 96년 임금정책 방향

언제까지나 임금교섭이 다툼의場이 될 것인가. 이제 열심히 일한 성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임금교섭이 분배의 몫을 둘러싼 '나눠먹기' 식 또는 '남의 것 더 빼앗아 내 몫 더 찾기' 식의 소모적 다툼이 되지 아니하고 분배의 원천을 키워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별 교섭체제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노사는 서로 자기 이익만을 앞세우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과점 대기업의 경쟁적 임금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중소기업은 과도한 임금인상 압력으로 경영에 엄청난 애로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실정에 따라 임금을 주다 보면 인력 확보가 안되어 생산 중단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대기업에 납품 기일을 못 지키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기업별 교섭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 차원에서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시



김성중  
노동부 노사협의과장

시근로자 생계비를 근거로 12.2%, '민노총'은 표준생계비 논리에 따라 14.8%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2월 8일 생산성모델에서 자본기여도를 공제하고 4.8%의 독자적인 인상률을 제시함으로써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는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案이 근로자의 생계비 상승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2월 22일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개별기업의 임금교섭 준

거로 권고하였다.

**국민경제를 고려해 적정임금인상률로 5.1~8.1%를 권고**

87년 이후 우리의 임금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 근로자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임금이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민

경제노동생산성 모델에 입각해 적정 협약임금인상률을 5.1~8.1%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95년도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인 112만원(초과급여 제외)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은 사업장은 5.1~6.6%, 그 미만인 사업장은 6.6~8.1% 범위내에서 임금교섭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 임금격차의 해소

직종별·학력별 및 성별 임금격차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87년 이후 점차 커지다가 92년, 93년에는 축소되었으나 94년부터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高賃 대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高賃 대기업 勞使에게 명목임금 인상에 치중하기보다 사내복지기금 조성, 종업원 지주제, 산업안전 및 인력개발 투자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주력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및 복지지원의 확대, 수급기업 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 勞使에게 명목임금 인상에 치중하기보다 사내복지기금 조성, 종업원 지주제, 산업안전 및 인력개발 투자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주력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및 복지지원의 확대, 수급기업 협력기금 조성 등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확충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독과점 대기업이 임금인상 재원의 일부를 제품 가격 인상이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하여 소비

(표 1) 임금상승률 및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변화 추이

(단위 : %)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87~95년
명목임금	10.1	15.5	21.1	18.8	17.5	15.2	12.2	12.7	11.2	14.9
생산성	10.0	14.6	7.2	15.0	16.8	9.1	8.1	9.5	-	11.3

註: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 (경상 국내총생산 ÷ 취업자수)의 증가율

(표 2) 임금격차 추이

(단위 : 배)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사무직/생산직	1.67	1.57	1.48	1.41	1.39	1.35	1.33	1.29	1.29
대졸/고졸	2.24	2.03	1.91	1.86	1.79	1.69	1.61	1.56	-
남자/여자	2.00	1.95	1.90	1.87	1.83	1.79	1.77	1.71	1.68
500인 이상/10~29인	1.14	1.26	1.35	1.35	1.41	1.38	1.36	1.38	1.40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표 3) 임금체계의 변화 추이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정액급여	71.6	70.8	69.4	69.1	69.2	68.6	68.7	67.9	67.7
특별급여	15.8	17.3	19.5	20.0	20.5	21.4	22.0	23.1	23.1

註: 임금총액 = 100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자나 중소기업에 전가하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의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모기업의 수급기업에 대한 대금지급시기·결제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해 나가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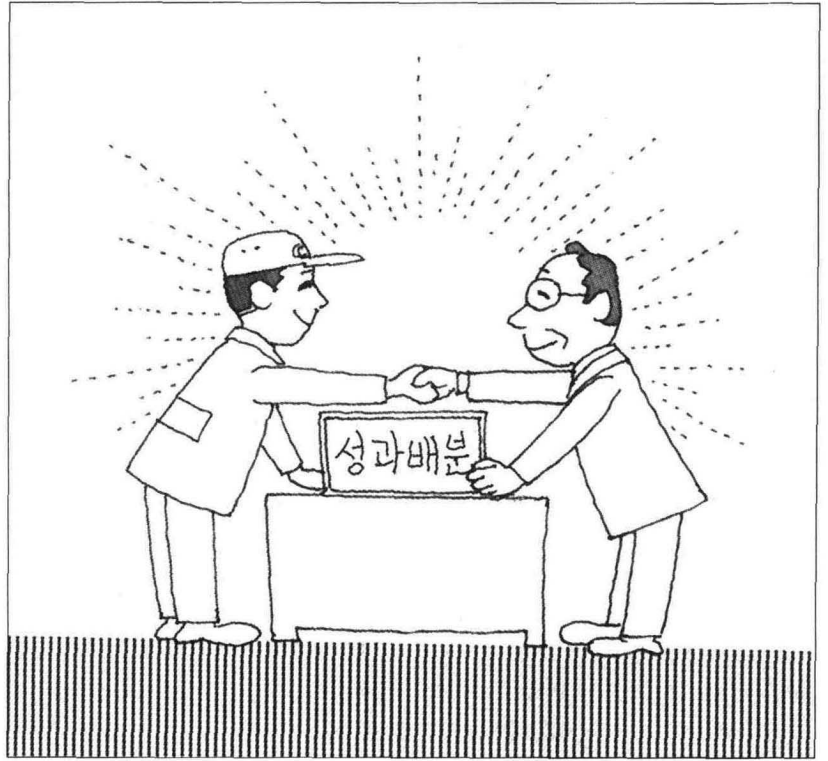
### 임금체계의 개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은 임금구성항목이 복잡다기하여 근로자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임금관리에 경직성을 초래하였다.

또한 그동안 노사는 기본급 중심이 아닌 상여금이나 일시금, 각종 수당의 인상에 치중하여 임금총액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은 낮아지고 특별급여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복잡다양한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향후 임금교섭시 추가적인 수당시설을 자제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통·폐합하여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무의 성격,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직능급의 확대를 권유하고 변동급 부분을 강화하여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 합리적 임금교섭 관행의 정착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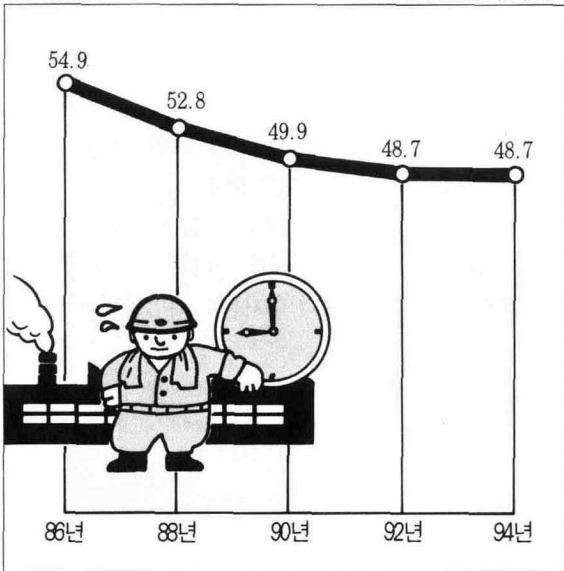
성과배분제도는 노사가 경영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후 실적에 따라 근로자에게 성과의 일부를 배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개별기업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을 하고 노사합의로 성과목표와 측정기준, 지급방법 및 성과달성 프로그램 등을 명료하게 마련하며, 추후 목표가 달성된 때에는 기여분만큼 공정하게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경영성과로 나타난 이익의 배분은 일회성의 현금급여로 소진하기보다는 사내복지기금·우리사주제도·인적개발비 등 근로자의 장기적인 복지를 위해 투자하도록 권유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생산성과와 관계없이 형식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연말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등 임금인상의 편법적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해 나갈 것이다.

<그림> 주당 실근로시간 추이(제조업)

(단위:시간)



노사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교섭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협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교섭을 개시하고, 본교섭 전에 예비교섭을 충실히 하며 교섭과정에서 현실성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함께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단협이 동시에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기본급 또는 수당 등 일부 항목만 교섭하기보다 임금전액을 대상으로 교섭하여 교섭비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계는 임·단협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週 44시간에서 週 42시간 또는 週 40시간으로의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실근로시간은 외국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나 86년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근로자의 여가선용, 장기적인 노동력 보호를 위하여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해 나가되, 인위적인 단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원만한 임금교섭을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노사간 임금교섭시 활용하도록 경기동향·물가상승률 등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고용보장과 생활안정, 근로의욕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복지시책을 대폭 확충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필품 등의 물가안정과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협력이 우수한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근로자에게는 주택자금 용자 등 근로복지진흥기금 배정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은행자금대출시 대출기간의 연장과 함께 금리를 우대하며, 해외연수·산업시찰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기관 배출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은행자금대출시 우선용자 및 금리우대를 강화하며, 회사채 발행 평점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조치를 취

**정부는 복잡다양한 임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향후 임금교섭시 추가적인 수당신설을 자제하고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통·폐합하여 기본급의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무의 성격,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직능급의 확대를 권유하고 변동급 부분을 강화하여 임금관리의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며, 노사협력 업체 및 근로자를 우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각종 기금을 예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임금교섭 준거가 발표된 이래 임금교섭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에서 해마다 거듭되는 여러 번의 교섭을 통하여 노사간에 나름대로의 교섭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근거로 할 것인지, 언제·누가·어떻게 만나 교섭을 할 것인지 등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상호 이해가 형성된 까닭에 교섭횟수와 기간도 단축되고 교섭비용도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교섭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또한 정부의 책무일 것이다.

정부의 권고를 일부에서는 '임금 가이드라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정부의 임금정책을 임금 탄압책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교섭준거는 개별기업의 임금교섭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권고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므로 '임금 가이드라인'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향후 임금교섭은 노사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담의 보람을 함께 나누는 잔치의 자리가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하나의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 **김원**

**오늘** 해는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달성한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연구개발투자 100억달러를 발판으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세계경영의 중심국가로서 통일과 번영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

기술개발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제13위 수준의 과학기술력을 2010년까지 명실상부한 '선진7개국중심국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길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학기술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중심의 전방위적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총체적인 국가과학기술

## 과학기술의 대중화

기이다.

선진 각국은 WTO체제하에서 국제환경 변화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기술우위정책을, 대외적으로는 기술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과학기술은 경제·사회 변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래사회는 미국의 MIT大 레스터 서로(Lester Thurow)교수가 갈파한 대로 '돈이 지배하던 자본주의사회에서 두뇌의 힘(Brain Power)이 지배하는 腦本主義 즉, 지식산업사회'로 전환되고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는 이른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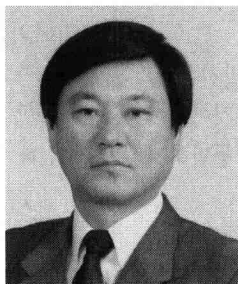
앞으로 대내외적인 경제·사회 변혁을 주도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과학기술로서 현재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11.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에는 20.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극히 제한된 자원조건과 일천한

술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대중화는 미흡한 수준

한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수용하며 나아가 과학기술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때 비로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과학기술력의 극대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없이는



**김덕제**  
과학기술처 기술진흥과장

불가능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받아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높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유전자조작·장기이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 또는 윤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아울러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에 따라 온실효과 등 지구오염이 심각해짐으로써 과학기술의 역기능문제도 점차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에 따른 과학적 사고의 이탈현상과 환경의 오염, 자원의 고갈 등 인류공존을 위하여 범세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류숙원의 과제 역시 과

학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급변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과학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 능력과 합리적인 과학정신을 함양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에게는 과학기술에의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능력을 진작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 과학기술자에게는 윤리성·도덕성을 확립하고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일반국민들에게는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정신의 함양 및 풍토조성이 미흡하여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부족과 정보의 미공개로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시행착오를 야기하기도 했으며, 환경공해·도덕성침해 등 과학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가발전은 단순한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를 부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과학대중화사업을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로 정하고 사회단체를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93년 과학대중화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선언하였고, 일본은 93년도에 '젊은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과학기술백서를 내놓았다.

과학대중화운동이 현대사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를 서강대 김학수교수는 첫째로, 과학기술이 20세기 인류문화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는 점 둘째로,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 셋째로, 모든 공공정책이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고 그런 공공정책에 대한 결정들이 민주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는 앞으로 청소년과학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론지도층에 대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며, 과학문화와 생활 간의 연계프로그램을 확충하는 한편, 대중매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대중화사업을 위한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문화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춘 대중들이 공개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넷째로,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 없이는 과학기술자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대중적 지지 내지 후원획득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대적 민주주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과학대중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과학대중화운동은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국민들의 연대의식을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 과학기술 대중화 위한 시책 추진

과학기술대중화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과학화를 내실있게 추진

학교안에서의 청소년과학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교육제도, 교육여건, 교육과정 및 교과목, 과학기술교사 등 각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학교밖에서의 과학화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적 과학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과학관 운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과 참여과학관(Hands-on Museum)을 전국 주요 대도시에 건설·추진하여 이들 과학관들을 국립중앙과학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하는

〈표〉 과학관 현황비교

(단위:개, 천명)

	한 국	미 국	일 본	서 독	영 국
과학관수	27	1,950	167	913	458
1개당 인구수	1,570	126	734	67	125

것은 물론 민간 또는 개인독지가에 의한 사립과학관 설치·운영을 적극 유인할 계획이다.

### 과학문화와 생활 간의 연계프로그램 확충

과학대중화는 사회지도층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에 대한 친화력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언론인·정치인·기업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과학기술정책과정을 94년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출연(연)·대학·직장교육관련기관·언론기관·교육센터 등으로 연수과정 설치기관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또한 과학기술이 가져올지 모르는 역기능과 과학기술의 개발에 반대하는 계층의 주장에 대비한 국민이해 프로그램을 추진함과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함양, 정책결정과정의 공개 및 주민감시제도의 수용 등도 병행추진해 나갈 것이다.

첨단과학기술과 문화 및 예술활동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사회 여타분야 사이에 놓여있는 단절을 극복하고 과학기술과 예술의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그래픽스를 이용한 문화재복원 등 첨단과학기술을 문화에 적용·활용하는 전시프로그램 등의 개발공급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여나갈 것이다.

### 과학기술 이해를 통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성과주의 풍조 만연과 국민의 안전의식 결여로 최근 각종 대형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되어 국가전반에 걸쳐 커다란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의 혜택을 한껏 향유하고 있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개발을 통해 안전한 삶을 향유토록 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의 올바른 이용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신의 생활화로 질서와 질차가 중시되고 인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안전문화가 국민의식 속에 자리잡도록 하는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과학기술국민이해사업과 병행하

여 안전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안전문화토론회·세미나, 안전문화영화 제작·방영 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재기술연구센터(95년 11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설치, 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기술개발 착수 및 원자력안전의 날 제정(매년 9월 10일)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 과학기술대중화사업 추진체제 구축

앞에서 거론한 정책방안들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과학화 및 이해사업추진체제를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의 전담 중추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을 지난 3월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가칭) '과학기술문화기금' 조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진흥체제를 구축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일반국민, 과학자, 또는 법인이 회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자율단체인 (가칭) '한국과학기술문화진흥협회'를 주축으로 전국적인 과학기술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과학기술이해 확산 및 과학의 생활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대중화사업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때 기술고도화사회·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과학기술대중화정책을 피동적인 과학기술이해 중심에서 능동적인 국민참여 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조·합리·능률의 과학적 정신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 21세기를 대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과학기술 문화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과학자의 자존심

백재현

서울경제신문 기자/과학기술처

4 는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과학자라고 생각한다. 과학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학문영역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쌓아간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이론을 제기할라치면 결사적으로 논쟁을 벌이곤 한다. 내 연구영역, 내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믿음, 그것이 자존심의 기초일 것이다.

우리는 인문과학뿐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수십편의 논문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벌였던 예를 과학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어쩌면 자존심이 약한 과학자는 훌륭한 과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민정부는 정책목표로 '과학입국'을 부르짖으면서 과학자들을 대접하겠다고 한다. 자연계 대학정원을 늘리고, 과학예산을 늘리고, 연구원들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이제 國是처럼 되다시피 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요체가 바로 과학이니 당연하다.

정말이지 요즈음처럼 과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때가 일찍이 없었지 않았나 싶을 만큼 저마다 과학기술

발전을 부르짖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높아져가는 기대만큼 자존심을 갖고 있는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얼마전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科總의 대표를 국회의원 전국구 공천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서를 언론 등을 통해 배포한 적이 있다.

그동안 얼마나 정치논리에 의해 속앓이를 했으면 입법과정에 참여해 서라도 의지를 관철시켜 보려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쩐지 결길로 가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정치의 전문성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 과학자들이 적극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곳곳한 자존심으로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을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편 국내 과학자의 스타일을 구기는 사례가 올해도 반복됐다. 지난해 국제과학기술논문색인에 오른 한국과학자의 논문수는 5,814편으로 세계 22위였다. 해마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끄러운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인구 1만명당 미국 10.6편, 일본 4.7편인 데 비해

우리는 1.3편에 그쳤다. 굳이 국제논문색인에 오른 것만 연구성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교역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한국의 위상에는 분명 걸맞지 않다.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4년 앞두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져가는 국제기술경쟁상황에서 과학자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학자가 그 역할만큼 충분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

정부도 과학자를 대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겠지만 과학자 스스로도 대접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자존심을 지키고 가꿔야 할 것이다.

과학자가 정치에 휩쓸리면 허약해진다. 자존심이 약해진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존심을 내세우기 힘든 영역이다.

나는 평소애 살찐 신부나 승려애써 존경하지 않으려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마찬가지로 말쑥한 옷차림의 과학자는 웬지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을 버리지 말아야 할 사람이 과학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자존심 강한 과학자를 존경한다. **백재현**

# 미운 시누이?

박태건

문화일보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국 세청은 무섭고 公正委는 귀찮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출입하다가 지금은 업계에 나가고 있는 동료 기자가 얼마전 술자리에서 전해준 財界의 공정위에 대한 평가다. 의미심장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일 발족 15주년을 맞이했을 뿐이다. 공정위의 역사가 100년을 넘은 미국 등과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부여된 권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이같이 뒤틀린 통념이 생긴 데에는 재계와 공정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우선 재계의 책임이 상당하다. 그동안 재계는 정부가 이끄는 ‘일본형 호송선단 방식’의 산업정책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재계는 “이제 경제는 우리에게 맡기고, 정부는 뒷전으로 물러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재계는 말처럼 ‘공정경쟁’을 완전 體化하고 있지 못하다. 외국 대기업이나 국내 라이벌사의 거센 진입 공세라도 펼쳐지면 아직도 정부에게 SOS를 보내는 게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처럼 절대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사사건건 공정경쟁이라는 고지식(?) 주문을 내는 공정위는 재계에게 성

가신 존재일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해마다 대기업집단 등이나 지정, 기업확장에 족쇄를 채우는 ‘미운 시누이’라는 게 재계의 평균인식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진 데에는 공정위 자체의 책임도 적지 않다.

공정위 구성원들이 즐겨쓰는 비유가 ‘심판관’이다. “공정위는 동네축구를 세계축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이자 심판이다”, “중소기업·대기업·소비자·생산자·행정기관 등 모든 고객에게 불편부당한 심판이 되겠다” 등등, 공정위 직원들은 즐겨 자신을 공정한 심판에 비유하곤 한다.

당연히 공정위는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자-소비자 중간의 공정한 심판인 동시에, 정부-재계 사이의 엄정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의 역할은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후자는 아직 그렇지 못한 느낌이 든다.

한 예로 지난 몇해 동안 정부와 재계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붙고 있는 핫이슈가 행정규제 완화다. 행정부 출범후 행정규제를 완화한다고 정부가 나름대로 애를 썼으나, 지금도 재계는 “중이 제 머리 깎는 것 봤냐”며 “아직도 행정력에 의한 진입규

제 등 각종 규제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이 대단하다. 최근 전경련이 정부에 철폐를 재촉할 100대 행정규제 선정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앞으로 관-민 사이의 뜨거운 2차, 3차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관망중에 있다. 비공식 석상에선 “철폐해야 할 행정규제가 아직 많다”는 재계 주장에 공감하지만 드러내놓고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다. 예산·인사권·감사권 등을 쥐고 있는 관계기관들을 의식한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심판이 어느 한 팀을 의식하면 공정한 게임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재계 불만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자본주의가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소유의 과잉집중, 관권의 비대강화 등의 술한 모순을 낳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위에 거는 일반의 기대는 남달리 크다. 수많은 정부부처 중 일개 부처라는 인식에서 탈피, 민과 官 사이의 신뢰를 잇는 지혜로운 솔로몬, 엄정한 포청천으로 역할하겠다는 공정위의 자기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박태건**

# 국내경기, 안정성장국면으로 移行

## 조경규

재정경제원 경제조사과 사무관

작년부터 이어진 경기양극화 지속, 부도율 급증, 전직 대통령 비자금사건 등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한 국내경제는 1/4분기까지의 각종 경제동향을 감안할 때,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경기급랭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완만한 안정성장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투자활동이 여전히 활발하고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채감경기와 중소기업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 산업생산·실업률 동향

(단위 : 전년동월비, %)

	95년 3/4	4/4	96년 1월	2월	1~2월
산업생산	13.2	8.4	12.4	8.2	10.3
(경공업)	(-0.3)	(-1.5)	(2.7)	(-3.4)	(-0.3)
(중화학)	(18.4)	(11.2)	(15.0)	(11.2)	(13.1)
출 하	13.3	8.7	13.5	8.6	11.1
제조업평균가동률(당기)	82.3	81.2	82.2	83.4	82.8
생산능력	9.7	9.0	7.6	7.5	7.6
실업률(당기, 계절조정)	2.0	1.9	1.9	1.9	1.9

### 활발한 생산·투자활동 지속

작년 4/4분기 이후 둔화되던 산업생산·투자활동이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각종 중소기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경기도 다소 호전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표 2〉 설비투자·건설투자 동향

(단위 : 전년동월비, %)

	95년 3/4	4/4	96년 1월	2월	1~2월
국내기계수주	0.9	-1.5	34.3	6.0	19.4
(민간)	(20.1)	(9.7)	(8.8)	(-4.1)	(1.8)
(공공)	(-38.6)	(-32.6)	(150.8)	(87.6)	(125.1)
기계류내수출하	22.1	8.0	14.0	9.1	11.5
국내건설수주	29.8	18.7	38.0	91.8	63.4
건축허가면적	-25.6	-12.2	16.6	-4.0	5.0

산업생산·출하는 작년의 높은 증가에 비해서는 둔화되고 있으나 작년말의 부진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증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기업의 설비이용 수준과 인력사정을 나타내는 제조업평균가동률과 실업률도 아직까지는 완전가

동·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4/4분기에 위축되었던 투자는 SOC투자 조기집행 등 공공부문의 투자증가, 주택시장안정대책 추진 등에 힘입어 국내기계수주·국내건설수주 등 관련지표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설비투자는 작년말에 선박수입 감소, 비자금사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최근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축 부문은 다소 부진하나 공공부문의 도로·교량 및 항만 등의 토목공사 호조로 국내건설수주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94~95년 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상대적 영향 등으로 그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 부문의 국내기계수주가 둔화되어 향후 생산능력 증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활발한 생산·투자활동을 반영하여 현재와 미래의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선행지수 등 경기지표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향후에도 급격한 경기둔화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경기급랭의 가능성은 적으며,  
경기양극화 지속 등  
부분적인 문제가 있으나  
금년에는 정부가 목표한 대로  
물가안정 속에서 7~7.5%의  
안정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 중소기업경기와 체감경기도 다소 회복되는 추세

경기양극화 지속 등으로 그동안 전반적인 호황 속에서도 부도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등의 경기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종 중소기업지원대책의 시행, 중소기업청 발족 등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한상공회의소·한국은행 등 각종 기관에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

지수(BSI)에 의하면,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의복·모피, 목재·나무 등의 경공업·중소기업·건설업 등의 체감경기도 2/4분기 이후에는 상당수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 부도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표 3〉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95년 4/4	96년 1/4	2/4(전망)
대한상공 회의소	2,000개 광공업체	104	91	119
	중소기업	102	88	117
한국은행	2,400여개 업체	90	87	102
	중 소 기 업	90	86	103
	경 공 업	85	87	103
	건 설 업	67	68	103

註: BSI [(호전업체비율-악화업체비율)×100-100]가 100 이상이면 '경기호전'으로 전망

〈표 4〉 경기지표 동향

	(단위 : 전월비, %)				
	95년10월	11월	12월	96년1월	2월
경기선행지수	0.7	0.6	0.1	0.9	0.7
경기동행지수	0.7	0.6	0.1	1.1	0.8
(순환변동치,P)	(0.3)	(0.1)	(-0.4)	(0.7)	(0.3)

### 무역수지는 작년에 비해 개선

연초에 확대되었던 무역수지적자(수출입차)는 3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되어 1/4분기로는 작년에 비해 축소되었다. 수출은 작년의 높은 증가율보다는 낮으나 20%를 상회하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고 2월 이후 수입증가율을 상회하여 1/4분기 수출입차는 작년보다 5억달러 정도 개선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하강기의 1/4분기의 수출입차가 연간의 60% 이상임을 감안하고 우리의 경제규모·교역규모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수출입차는 크게 우려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적자의 내용도 투자·수출증대를 뒷받침하는 원자재·자본재 수입증가가 주요 요인이므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환율동향 등을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세계성장·교역 등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수출의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되고 향후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입수요 증가가 둔화되어 경상지수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총수요관리와 생산요소가격의 안정,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효율적 추진 등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소비자물가는 2월 이후 안정세로 돌아서

의료보험수가조정, 종량제 체제전환 등에 따른 유류가격상승 등으로 연초에 높게 상승하였던 소비자물가는 2월 들어 설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3월중에는 납입금·버스요금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0.8% 상승에 그쳐 연초의 물가불안 우려를 불식시키고 90년대 들어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전년동월비로도 금년 들어 처음으로 4%대로 낮아졌고 전년말 대비로는 물가가 안정되었던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전되었다. 생산자물가도 3월중에 전월비 0.3%가 하락, 전년동월비로는 2.2%만이 상승하여 9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총선 등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예년의 경우 1/4분기까지의 상승률이 연간의 50%를 상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목표인 4.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		
	96년 1월	2월	3월
전년말 대비	0.9	1.4	2.2
(전년동월비)	(5.1)	(5.1)	(4.5)

註 : 95년1/4분기 : 2.4%(3월중 : 1.4% 상승),  
91~95년 평균 3월중 상승률 : 1.2%

〈표 6〉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달러, %)			
	95년 1/4	95년 3월	96년 1/4	96년 3월
수 출(증가율)	261.9(31.7)	100.0(31.3)	318.3(21.5)	117.9(17.9)
수 입(증가율)	305.2(35.3)	116.7(40.3)	356.2(16.7)	120.9(3.6)
수 출 입 차	-43.3	-16.7	-37.9	-3.0

### 장·단기금리는 안정세 지속

총통화가 연간 목표증가율(11.5~15.5%) 범위내에서 안정적 증가(96년 2월 :  $M_2$  平殘 14.7% 증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중자금사정의 호조 등을 반영하여 장·단기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초에 12%를 상회하던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96년 1월말 12.04%)이 지난 3월말에는 11.5%를 하회하는 수준(96년 3월말 11.44%)으로 떨어졌으며, 콜금리는 10% 이하 수준(96년 3월말 9.36%)까지 하락하였다.

그동안 어려웠던 건설업계 자금사정도 주택시장안정대책 시행, 표준건축비 조기인상 등으로 미분양주택수가 작년 10월에 비해 2만4천호가 감소하면서 다소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화지표가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은 아직도 높은 상태이므로 자금사정 완화가 금리인하로 연결되도록 여건조성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에도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산업은행·전경련 등의 기업설비투자계획 조사에 의하면 증가율은 낮아지겠지만, 투자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의 성장률 수준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SOC투자 확대, 본격적인 민자유치사업 시행 등에 따라 토목 부문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주택건설경기도 서서히 회복되어 건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경기급랭의 가능성은 적으며, 경기양극화 지속 등 부분적인 문제가 있으나 금년에는 정부가 목표한 대로 물가안정 속에서 7~7.5%의 안정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경제운영은 확고한 물가안정기반 위에서 경기양극화 완화노력을 지속하고, 임금·물류비용 등 생산요소의 가격안정을 통해 高비용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제체질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기업인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경영·투자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국립**

# 금년 유럽경제, 성장 부진할 듯

이경숙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유럽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유럽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이 수출 둔화와 투자 및 내수부진으로 성장속도가 줄어들고 있고, 프랑스는 공공부문 파업 후유증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국 역시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5%로 둔화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실업률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EU 전체 실업률은 10.5%로서 10명당 1명꼴로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실업률과 낮은 경제성장률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럽 주요국인 독일·프랑스·영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을 살펴본다.

## 독일은 경기침체 가속화되고 있어

독일은 지난 93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후 재작년 2.9%로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작년 3/4분기중 제로성장을 보인 후 4/4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0.5% 감소하여 전체 성장률이 1.9%로 낮아졌고, 금년 1/4분기 역시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금년의 경제성장률은 1.5% 내외로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여타 유럽통화에 대한 마르크貨 강세 지속으로 독일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전기전자·기계 부문의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어 금년의 수출증가율은 작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인원감축을 단행하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도산한 업체가 2만2,500개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실업률은 전후 최고 수준인 10.3%대(계절변동 조정 후)에 달하고 있으며 실업자도 43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건설업 부진으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연말에는 실업자수가 500만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이 같은 저성장은 마르크貨 강세 및 고임금에 따른 대외 경쟁력 약화,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 상승, 노동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통일비용 부담으로 재정운용이 어려운 점 등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비투자면에서도 작년 이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금년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여기에는 독일 대기업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에 설비를 이전·확대하고 있는 반면, 舊동독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기업들은 시간당 평균 30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고임금, 과도한 사회보장비용, 경직된 기업 관련 법규 등을 피하여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민간소비지출 역시 금년에도 그다지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 低賃金 근로자에 대한 세금감면폭 확대와 금리인

하 등으로 약 270억마르크의 가치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失職에 대한 두려움, 지방세 인상,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요인으로 2% 증가에 머무를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기부진에 대응할 재정·금융정책이 별로 신통하지 못하다는 데 독일정부의 고민이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GDP대비 3.6%에 달해 통화통합참여조건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금년 들어 통화량이 목표치인 4~7%를 훨씬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어서 금리를 내릴 처지도 못된다.

구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구서독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금과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막대한 재정지출이 계속되고 있고, 실업증가로 사회보장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편, 경기부진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금년에도 재정적자 감축이 어려울 전망이다.

### 프랑스 경제, 하반기에나 회복 가능

프랑스경제는 재작년 2.9%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았던 파업발생으로 소매매출과 생산이 감소하면서 4/4분기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그 여파는 금년 여름까지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1.6%에 그칠 전망이다.

소매매출의 경우 3/4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파업으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공급과 유통면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소비감소로 수요가 줄어들어 생산도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력이 딸리는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도 작년 8월 1일부터 부가세율이 18.6%에서 20.6%로 인상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고 失職에 대한 우려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그 결과 금년 민간 소비증가율은 1.2%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 부문에서도 작

년의 신축 및 허가건수 역시 재작년에 비해 5% 정도 감소했다.

여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최대 현안과제 역시 고실업과 재정적자이다. 현재 실업률은 11.8%인데 청년층의 실업률은 20%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의 재정적자는 당초 목표인 3,220억 프랑을 상회, GDP대비 5.5%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의 징수액이 줄어들어 큰 폭의 재정적자 감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프랑스가 3년 후부터 시작되는 통화동맹에 참여하려면 늦어도 내년말까지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줄여야 한다.

프랑스정부는 경기하강세를 막기 위해 시장개입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4.45%였던 금리가 현재 3.80%까지 인하되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 내외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시장개입금리는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영국은 완만한 경제성장 지속 예상

지난해 2.6% 성장률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 경제는 금년에도 2.5%의 성장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영국은 그동안 민영화, 사회보장비 축소, 노동시장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물가안정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4/4분기부터 소비지출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산업생산도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특히 12월의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감소하여 9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난 연말 성탄절 특수가 예상외로 저조하여 12월의 소매매출이 전년동월비 1.7% 증가에 그침에 따라 누적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다.

이러한 경기둔화조짐이 보임에 따라 英蘭은행은 지난 12월 13일 기준대출금리를 6.75%에서 6.5%로 인하한 후 한달 만인 금년 1월 18일에 다시 6.25%로 추가 인하하였다. 그런데 1월중 소매판매액이 전월보다 0.6% 감소하고, 제조업의 선행지표인 구매관리자 지수가 1월 50.3에서 2월에는 49.8로 하락하는 등 금리인하효과가

**유럽경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유럽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과 함께 프랑스·영국 또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전체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심리가 위축,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치자 3월 8일 기준대출금리를 6%로 재인하, 투자증대와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물가가 3%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인플레이 압박이 없을 것이라는 낙관하에 단행되고 있다.

영국의 실업률은 독일과 프랑스와는 달리 29개월째 계속 낮아지고 있다. 제작년 9.3%였던 실업률은 금년 1월에 7.9%까지 하락했다. 이는 임금외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자영업 지원과 시간제 고용확대를 적극 추진한 고용정책에 힘입은 것이다.

### 독일과 프랑스는 세금감면 등 경기부양책 발표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경기부양 및 고용확대를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독일 부양책의 핵심은 세계개혁과 기업활동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에 걸쳐 조세제도를 개편하는데 영업자본세 및 재산세 폐지, 구동독지역 재건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세인 통일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2%포인트 인하, 소득세 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환경개선방안으로는 기술집약적 회사 창업시 일정기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운전자금의 저리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간외 노동금지,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 병가의 일부 무급화, 소매점 영업시간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독일정부는 재계 및 노조와 협력하여 2000년까지

〈표〉 유럽 주요 3국의 경제지표

(단위 : %)

		94년	95년(추정)	96년(전망)
독 일	GDP성장률	2.9	1.9	1.5
	GDP대비 재정적자	-2.6	-3.6	-4.0
	실업률	9.6	9.6	10.7
	무역수지(억달러)	452	682	765
프랑스	GDP성장률	2.9	2.4	1.6
	GDP대비 재정적자	-6.2	-5.5	-4.5
	실업률	12.2	11.5	12.0
	무역수지(억달러)	147	209	219
영 국	GDP성장률	4.1	2.6	2.5
	GDP대비 재정적자	-6.9	-5.0	-3.8
	실업률	9.3	8.3	7.5
	무역수지(억달러)	-161	-175	-180

자료 : 각국 통계청자료 및 산업연구원 전망치

실업률을 5%로 낮추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소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대' 약정에 합의했다. 이 약정은 使團이 고용안정을 약속하고 노조측은 실질임금인상요구를 하지 않으며 정부는 창업지원, 기업부담 사회보장납입금 비율 축소 등 고용촉진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프랑스도 세금인하와 감면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진전을 꾀하고 있다. 이자 비과세 저축성예금에 대한 이자율 4.5%를 3.5%로 1%포인트 인하하고, 내구소비재 구입자들에게 1인당 최대 5천프랑 한도내에서 소비자대출금 이자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소비지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대출금리 1%포인트를 인하,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택융자금 기준 완화, 사무실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 6%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초년도 상각금액을 현 4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 경기부진으로 통화통합 차질 빚어질 듯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 경제는 회복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실업자도 더욱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부진이 통화통합 실현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활용되고 있어서 통합추진의 선봉장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자크 샤테르 EU 집행위원장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영국의 메이저총리는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통화통합시기를 2000년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고, 지스카르 데스탱 전 프랑스대통령은 통화통합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마저 데스탱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독일 정부내에서도 무리한 통합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샤테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정부와 산업계, 노조에게 경쟁력 강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공동노력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199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통화통합을 차질없이 진행시킬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통화통합을 목전에 두고 유럽경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원**

# 문화자본주의를 향하여

한국은 해방 이후 국가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를 채택하였다. 정부수립 이후 사유재산제도, 경제적 자유 및 시장경제의 원리가 헌법상 보장되었다. 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하여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높은 인구밀도, 두 차례의 석유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농업국가로부터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상회하는 신흥공업국가로 발전하였다. 한국경제발전의 성공 사례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발전의 모델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로, 오늘날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제체제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둘째로, 경제발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대내외적 환경, 국민의 가치와 요구, 국가 이익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시각이 필요하다.

끝으로 필자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가치있는 일이라고 본다.

‘문화자본주의를 향하여’라는 이 글의 주제는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한국경제체제 특히 경제발전에서 정부역할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발전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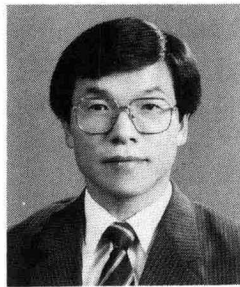
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공업화로 집약성장 달성

해방 직후 한국은 좌·우익의 이념적 갈등과 한국동란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빈곤에 처하였다. 따라서 50년대의 경제정책은 해외원조에 의존한 소비재의 공급, 전후복구 및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있었다. 5·16군사정부의 주도로 수립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공업화의 주춧돌이 되었다.

경제개발 초기에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은 정부주도하에 공업화를 통해서 달성되어야 하며,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의 도입은 불가피하고, 고용의 증대와 외채상환을 위해서 수출의 증대가 경제시책상 최우선 순위를 지니며, 물가안정이나 소득분배보다 성장이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지녀야 한다는 발전전략을 세웠다.

시대별로 한국경제개발 시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60년대는 가발·신발·섬유·제지·판유리 등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이 발전되었고, 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육성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 경제의 안정, 기술혁신,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의 자율화를 중시하여 경제안정과 산업구조조정을 이루어 왔다. 경제규모가 확대되어 복잡해지고 대내적 민주화와 냉전후 세계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당면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민정부하에서 「新경제 5개년계획」이 수립 실시되었



김창선 / 재정경제원 행정관리담당관

는데, 이 계획의 기본목표는 경제제도의 개혁, 성장잠재력의 증대, 경제의 세계화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이다.

그러면 반세기 동안의 한국의 경제발전은 경제문제를 얼마나 해결하였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경제가 해결해야 될 다섯 가지 목표 즉, 경제성장·물가안정·능력향상·분배형평 및 복지증진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다.

62년에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한 이래 수출주도 공업화전략하에 지금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GNP규모는 61년 21억달러에서 95년에 4,517억달러로 확대되었고, 1인당 소득은 61년 82달러선에서 95년에는 1만76달러로 1만달러를 상회하게 되었다. 수출 또한 같은 기간중 4,100만 달러에서 1,251억달러로 크게 증가되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2세기에 걸친 경제규모변화를 분석한 쿠즈네츠의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실질 GNP를 2배로 증가시키는 데 선진국의 경우는 24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의 경우는 9년에 달성한 셈이 된다.

거센크론 모델에서 보여 주었듯이 무역, 직접투자, 라이선싱계약을 통한 최신기술의 도입과 수출주도산업의 규모의 경제는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였고, 자본투자의 증가, 산업구조 조정, 교육과 직업훈련의 강화는 노동생산성을 높였다. 5차계획 이후 민간기업과 정부는 과학기술의 증진에 역점을 두어 R&D 투자를 증가시켜 왔는데 94년 현재 GNP의 2.3% 수준에 달하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는 지니係數가 0.4 이하인 비교적 낮은 소득 불평등도를 유지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투자를 했던 70년대를 제외하면 고용과 인적자본투자의 지속적 증대로 분배의 형평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에 따른 물가상승, 투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급등, 간접세 위주의 조세 구조는 분배의 형평을 저해해 왔다.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복지수준의 향상이다. 한국의 경제·사회지표를 보면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국민의 생활수준이 크게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의 식품비 지출 구성비를 보면 70년에 46.6%를 차지하던 것이 95년에는 28.0%로 낮아졌고, 영아의 기대수명도 70년에 63세였으나 95년의 경우 73세로 크게 높아졌다. 주택보급이나 상하수도공급도 계속 증대되어 왔으며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여 대학진학률 또한 크게 상승하였다.

한국경제의 놀라운 발전을 나타내는 말 중에는 '아시아의 용', '아시아의 호랑이', '아시아의 거인', '제2의 일본', '한강의 기적' 등이 있다. 이러한 집약성장을 이룬 발전 요소는 무엇일까?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높은 국내 저축률과 효율적인 외자조달, 기술혁신과 훈련을 통한 생

산성 향상, 경제주체의 기업가정신을 들 수 있겠다.

사회문화적 요소 또한 경제적 요소와 같이 집약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동아시아의 공업화 발전에는 신유교윤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였는데, 그 특성을 보면 교육열, 근면성, 절제, 자기개선, 권위주의와 집단성향의 경영방식이다. 다음으로 혁신적인 제도가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 경제개발 초기 기획·예산조정기구로서 경제기획원의 설립은 물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 월례경제동향 보고, 수출진흥 확대회의의 개최, 우수인력을 확보한 KIST·KDI와 같은 연구기관의 설립 등은 한국경제발전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룬 실제적인 엔진은 한국식 혼합경제체제이다. 한 국가의 경제체제는 그 나라 국민의 가치와 경제발전수준을 내포한 문화적 요소에 따라 상이하다.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 취약한 시장기능을 정부가 보완하여 발전시켜 온 반세기의 한국경제체제는 서구국가와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다.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이 시장메커니즘을 저해한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 왔다.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으로 가격구조의 왜곡이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초래하는 사례도 빈번히 거론되었다. 수출지향 및 전

---

###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문화자본주의'(Cultural Capitalism)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지향적 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문화자본주의란 시민가치를 공유하고 능률적인 사회조직을 갖춘 문화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사유제·이윤추구·시장메커니즘)을 지닌 경제체제이다.

---

락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경제력 집중을 가져왔으며, 유치산업의 보호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보호주의정책은 국내 소비자가격의 왜곡과 독점구조의 유지를 초래했다. 금융자금의 공급과 배분에 대한 정부개입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80년대 경제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의 지속적인 긴축구조의 유지는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와 서비스의 공급확대를 위축시켰으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민간부문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저해하였다.

지난 수십년 동안에 이룬 한강의 기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 정부주도 아래 경제적 요소를 효율적으로 조직·관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 대내적인 민주화와 경제의 세계화 환경하에 과거의 성장요소가 장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참여, 발전의 균형과 형평, 생활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한국경제도 세계경제 질서 속에서 경쟁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의 주도과 창의에 의한 시장경제메커니즘에 불가피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경제적으로 국경이 없는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과거 압축성장기의 경제제도와 성장잠재력의 한계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효과의 누수현상도 초래될 수 있다. 대내적으로도 민주화의 진전으로 높은 임금 상승 압력과 규제의 해제 요구를 받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는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규제의 해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증대, 경제안정기반의 구축, 분배형평의 개선, 국민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하는 근본적인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경제체제

세계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 교통·통신기술의 발달, 생산과 금융의 세계화, 세계무역기구(WTO)의 대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근원은 무엇인가? 세계사회를 대상으로 정립된 이론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사회변동이론을 원용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사회변동의 근원으로 기술과 경제구조·이념·인구·

문화·사회운동을 들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인구·지식·문화·조직으로 구분하여 세계경제질서의 추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은 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식품·용수·주택·고용·환경보전 등 경제의 모든 부문이 인구변화에 연관되어 있다. 92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약 55억명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발도상국의 인구증가율이 높고, 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노령화의 진전으로 노동력의 공급을 이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빈곤국가로부터의 노동력의 이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비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여성노동력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음도 중요한 변화이다.

지식에 대한 관심은 과학기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기업세계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동력원의 하나이며, 지식의 개념을 정보·기술·노하우(know-how)·이해력을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유익하다.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경제의 세계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기술혁신은 산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생산 및 유통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나 민간단체를 불문하고 부상하는 세계경제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자 기술혁신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신제품이나 시장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회의 제도나 양식은 문화의 개척과 교류를 통해 형성된 문화의 산물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도 인류문화의 역사적 소산이다. 문화의 핵심 요소는 신념, 규범 그리고 가치이다.

오늘날 대중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문화확산의 속도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지도자들도 문화부문에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세계적 기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상대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들이 문화상품의 개발에 열중하고 지역공동체와 함께 공존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세계화시대의 급격한 문화적 변화 속에서 경쟁우위를 지켜나가는 대안은 문화적 창조력을 키우는 일이다.

우리들은 조직사회에 살고 있다. 조직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인적자원 개발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환경의 개편을 중시하고 있다. 조직변화의 주요양상은 권한과 책임의 분권화, 팀활동의 장려, 신축성과 참여의

확대, 계층수의 감소 및 지역 공동체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미래의 지식산업사회에 대비하여 과학자들이나 기업지도자들도 조직내에서 지식의 창조를 가져올 수 있는 조직환경의 구축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직내의 인적자본은 물질자본 이상의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근래에 와서는 세계경제질서하에서 세계적 과제와 공동이익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국제조직들이 부상되고 있다.

### 문화자본주의 :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하여도 경제의 모든 부문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안정, 소득 분배, 공공재의 공급 등에 정부가 개입하는 혼합경제체제를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도는 각국의 문화적 특성, 자원보유, 기술수준, 상업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각국 시장여건에 따라 정부개입의 적정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1세기의 개막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세계인구의 변화, 지식의 혁명, 다양한 문화의 확산, 조직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민주화, 지방화, 통일여건의 조성 등 우리의 경제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장기적 발전 잠재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경제체제의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개편의 방향은 능력과 형평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창의력을 키우는 데 있다.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필자는 '문화자본주의' (Cultural Capitalism)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지향적 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의미한다. 문화자본주의 시민가치를 공유하고 능력적인 사회조직을 갖춘 문화공동체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속성(사유제·이윤추구·시장메커니즘)을

지닌 경제체제이다. 미래사회에서는 문화가 경제발전 잠재력의 새로운 요소를 제공해 주며 한 공동체의 문화양상이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초를 이루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키 위해서는 문화적 창의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새로운 문화자본주의 시대하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시대는 지났다.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새로운 발전의 동력원이 되는 문화자본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국민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생산성의 향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지향의 문화기반의 형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앞으로 정부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장

---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시대는 지났다.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새로운 발전의 동력원이 되는 문화자본주의의 시대가 될 것이다.  
국민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생산성의 향상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지향의 문화기반의 형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

경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지식과 문화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화의 창조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문화자본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개발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키우는 좋은 지도자와 엘리트집단을 필요로 한다.

한 국가의 경제체제는 그 나라의 지리적·문화적 요소, 국민의 가치와 경제발전의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도 경제개발 초기에 정부주도의 발전을 하여 왔고 경제활동에 정부가 깊이 개입하였다. 이제 미래의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경제체제를 갖출 때이다.

과거 2세기에 걸쳐 발전해온 자본주의의 신축성과 창의성의 장점에 비추어 앞으로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개인적 자유와 능력적인 시장기구에 바탕을 두어 시장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 능력적인 사회조직과 지식과 문화의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문화공동체 기반을 갖춘 문화자본주의의 모델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도 기업가정신과 문화의 창조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문헌**

# 교통의 지능화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

‘세계화 물류 주식회사’라는 중견 기업에 다니는 김부장은 대외업무가 많고 귀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출퇴근을 자가용 승용차로 한다.

매일 겪는 교통체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동차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요즘은 부쩍 더 길이 막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출근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김부장의 경우 톨게이트에서의 정체는 출근길을 더욱 짜증나게 한다.

오늘따라 앞에 사고가 났는지 차가 꼼짝을 못하고 있다. 무슨 일 때문에 막히는지,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은 어떤지 알 수 있으면 되돌아가기라도 할텐데라고 투덜대면서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놓고 멍하니 상념에 잠겨 본다.

집에서 출발전에 운전석 옆에 장착된 노트북 액정화면 같이 생긴 전자지도를 켜고 성남 분당 집과 서울 광화문 회사위치를 입력한다. 전자지도에는 무선통신을 통하여 교통정보센터에서 매분마다 보내오는 현재 시간대(Real Time)의 정확한 교통소통정보에 따라 가장 막히지 않는 최적의 주행 경로가 제시되고 아울러 해당 교차로에 이르면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등의 음성정보로도 안내된다.

톨게이트는 그냥 통과한다. 차 유리창에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의하여 통행료가 자동지불된다. 첨단도로시스템이 설치된 고속도로에 들어서면 무인자동운전시스템으로 전환되며 앞차와의 거리, 옆차와의 간격 등이 모두



한대영/건설교통부 종합계획과장

전자동 조정되므로 조간신문을 보거나 전자지도로 오늘 낮에 있을 바이어와의 상담장소를 물색하고 예약까지 한다. 평소 1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반 이상으로 줄었다.

사무실의 물류종합정보 전산망컴퓨터를 켜니 오늘 수송할 화물의 起·終點과 물량 등이 전국지도망에 한눈으로 보인다. 위성송수신장치(GPS)를 통하여 현재 운행중인 화물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배차계획을 세운다. 오늘 부

산항에서 입항하는 미국행 수출화물의 선적을 위하여 필요한 통관서류는 사무실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문서(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자동처리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평소 복잡하던 광화문 사거리의 차량흐름도 물 흐르듯이 시원하다. 신호주기가 사거리의 교통량에 따라 매순간 자동 조정되기에 그럴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질서 있고 편안한 모습이다. 정류장 전광판에 기다리는 버스가 몇분 후에 도착한다는 메시지가 안내되고 정류장에 설치된 모니터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몇번 버스를 어디에서 갈아타야 하는지, 지하철과의 환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가 되기에 그럴 것이다.

뒷차의 경음기 소리에 놀라 상념에서 깨어보니 앞차가 이제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채 1분도 안된 시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5년 또는 10년 후를 여행하고

온 기분이다.

### 교통의 지능화는 교통문제 해결 위한 최적의 대안

이와 같은 김부장의 공상(?)이 과연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가? 답은 “당연코 그렇다”이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이다.

그러면 이러한 교통의 지능화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와 통신 등 첨단 기술을 교통에 접목시켜 교통시설의 용량 증대와 교통안전의 실현, 서비스수준의 극대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운영 기법으로서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로 통상 분류하고 있다.

첫째, 첨단교통관리시스템(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은 도로에 교통량·차량번호·중량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검지기를 설치하여 도로상의 차량이동 상황을 매순간 파악하고 관제센터에서 분석하여 즉각적인 제어 및 관리를 수행케 하는 것으로서, 교통량에 따라 최적 신호주기의 자동조정, 통행요금 자동징수, 법규위반 차량 및 과적차량 자동단속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둘째, 첨단교통정보제공시스템(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은 차량에 장착된 전자지도 또는 PC·방송 등을 통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와 소요시간, 주차장 상황, 교통사고 발생이나 통제여부 등을 가정이나 운행중인 차내에서 신속·정확하게 파악 가능한 시스템이다.

셋째, 첨단대중교통시스템(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은 버스·전철·지하철·택시 등의 위치와 도착예정시간, 목적지까지의 요금과 소요시간·운행경로 등을 자동파악, PC·전광판 등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차량의 최적배차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넷째, 첨단물류운영관리시스템(Advanced Logistics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은 화물자동차 및 위험물 수송차량에 위성송수신장치(GPS)와 통신장치를 부착하여 차량의 현재 위치를 자동파악함으로써 화물의 위치에 따라 화물차 운행루트를 최적화하고, 정보망을 통하여 각종 화물의 통관과 서류처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다섯째, 첨단도로·자동차시스템(Advanced Road and Vehicle Control System)은 차량과 도로에 고성능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위험요인 자동탐지, 전후방 및 좌우측 차간거리의 자동조정 등을 통하여 무인자동운전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왜 필요한 것

인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교통의 지능화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비좁고 가용 용지마저 부족한 경우 매년 20% 이상씩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에 맞춰 교통시설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교통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시내도로의 교통지체가 20% 정도 개선됨은 물론 교통사고는 60% 이상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문가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외에도 물류비 절감과 환경오염의 저감, 통행료 징수, 교통단속 등의 자동화에 따른 교통관리비용의 최소화 등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교통상황의 사전예측으로 확실성이 높아지고 만성적인 체증으로 인한 짜증이 해소되는 등 국민교통편의 증진과 건전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능형교통시스템의 도입은 기술자립과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전자, 통신, 컴퓨터, 제어, 시스템 통합 등의 핵심기술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을 경우 선진국에 대한 기술 종속이 불을 보는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시내도로의 교통지체가 20% 정도 개선됨은 물론 교통사고는 60% 이상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것처럼 분명하다. 미국의 ITS America에 의하면, 향후 20년간 미국의 ITS 시장규모는 약 2천억달러(1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ITS개발이 완료되면 자동차가격의 30% 정도는 전자지도 등 ITS장비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국내의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는가.

### 선진국은 실용화단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수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의 지능화사업이 교통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관련 첨단기술의 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을 감안하여 지난 80년대부터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개발하여 이제는 거의 실용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91년에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을 제정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부와 ITS America 등 産·學·研·官이 중심이 되어 15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중에 있고 2011년까지 R&D와 시스템 구축사업에 2천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유럽의 경우도 EU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간자동차·전자통신업계 등에서 12억달러 이상을 투입, 개발중에 있다. 특히,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이 사업에 4,600억원을 투입, 개발중에 있으며, VERTIS/IMC(Interministry Committee for Vehicle, Road and Traffic Intelligent System)라는 관계부처 합동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활발한 연구개발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 초기 또는 착수단계에 있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외국기술을 도입하거나 또는 자체기술개발을 통하여 무인자동차, 차량자동인식시스템, 통행요금자동징수시스템 등을 개발중에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교통량감응 新신포시스템을 작년부턴 시범설치·운영중에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교통의 지능화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94년부터 「ITS 개발 국가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 위한 체계적 전략 필요

교통의 지능화는 이제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며 우

리에게 현실로 닥쳐온 과제 중의 하나이다. 교통의 서비스도 이제는 양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이용자 입장에서 질적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교통의 지능화사업은 10년 정도 뒤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개발 격차를 따라잡고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목표기간내에 국민에게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 국가기본계획의 수립과 핵심기반기술 개발 긴요

첫째, 범부처적이고 복합기술적인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의 구축목표와 정보·통신 아키텍처(architecture)의 구성, 시스템의 사양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시스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산·학·연·관의 합리적인 역할분담방안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울러 이러한 범국가적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ITS 구축사업에 필요한 핵심기반기술의 개발이다.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 자체 S/W와 H/W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선진국과의 치열한 국제시장 경쟁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한 檢知 및 통신시스템 통합기술, 무인운전 및 도로관리의 자동화기술 등이다.

이러한 기술은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범부처적이고 복합기술적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선진국과의 공동개발 등 다양한 기술확보 전략이 구사되어야 할 것

이다.

#### 국내의 관심 제고와 국가간 협력이 필수

셋째,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한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98년 10월 서울에서 4일간 개최기로 되어 있는 교통분야의 올림픽인 '제5차 ITS World Congress'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30~50여개국에서 3천여명의 교통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ITS에 관한 500여편의 논문과 100여개의 제품이 전시되어 선진외국의 기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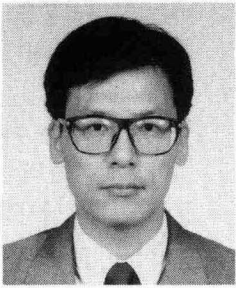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울러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중에 있는 과천지역시범사업은 교통의 지능화에 대한 최초의 실연무대가 될 것이다. 금년말부터 인덕원-과천-사당/양재 사거리에 이르는 지역에 교통량감소 新신호, 버스도착안내, 교통소통상황안내, 과적차량자동단속 등의 첨단운영기법이 실시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혜택을 지역주민이 실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산적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해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인 조직(가칭 '지능형교통시스템 추진위원회')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관계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업계와 연구소, 학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통 발전과 첨단기술 개발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필요**

# 수도권정책, 바뀌어야 한다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과들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관찰에 근거한 문제의식 때문에 수도권 분산정책에 대해서 광범위한 지지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또 수도권문제를 지역간의 형평과 국가경제적 효율이라는 두 정책목표 간의 상충, 그리고 선택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수도권정책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목표를 추구해 왔으며, 그 시도가 전적으로 실패하였던 반면에 눈감고 있기에 너무나 큰 부작용을 초

**명**

절이나 휴가철에 차량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리에서 “교통소통이 항상 이랬으면…”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비단 교통뿐 아니라 주택·교육·환경·국방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혼잡하다는 문제가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으로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리던 6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었고, 이 소박한 문제의식에 뿌리를 둔 집중억제정책은 이후 공간적으로 확대된 수도권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수도권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여러 종류의 개별정책이 담겨 있었지만, 그 흐름을 살펴보면 수도권 분산, 특히 공장·대학·공공기관 청사 등 소위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입지구제만이 강조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집중억제를 위한 각종 세제유인, 공공청사 지방이전 등의 행정조치, 권한의 지방이양 등 여타 대책들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데 연유한다.

## 실패한 수도권 분산정책

수도권 분산정책이 성공한 증거가 없다는 연구결

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논의 속에서 명백해진다.

첫째, 정책목표와 관련하여, 인구 및 산업분산만이 수도권 과밀·혼잡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시각이 옳은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어느 지역의 인구가 과다한가의 여부는 전국인구 대비 비중, 다른 나라와의 비교 등의 수치와는 무관하게 그 지역의 인구수용 능력과 대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최초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 나왔던 1964년 서울인구는 280만명으로 지금의 4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때의 서울이 지금보다 더 과밀·혼잡했는지 모른다. 또 현재 일부 지방도시들이 수도권보다 더 과밀하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권이 과밀하다고 해도 그 해결책을 주거·교통·상하수도·공공서비스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서 찾을 수도 있다.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정책보다는 이 접근법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동안 기반시설 확충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이 인구분산만을 강조해 온 한 가지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기반시설 건설에 주어지는 중앙정부의 보조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으며 수도권주민이 자신의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할 의사와 능력이

커졌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도 대량의 주택과 함께 전철·도로·상하수도·환경관련 시설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의 기반시설 건설비가 높다는 사실이 인구분산정책의 한 논거가 되기도 하지만 수도권 도로 1km와 지방의 도로 1km간 건설비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투자효율은 투자비와 사용편의 간의 상대적 비교로 평가되어야 하며, 웬만한 지방도시에서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투자효율이 더 높을 것이다.

둘째, 설사 인구 및 산업분산이 바람직한 목표라고 하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 수도권정책에 대한 지지여론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미련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제조시설에 대한 규제가 엄격히 집행되었다더라면 전체공장수의 59%에 달하는 영세 무등록공장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시화·남동공단 등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면 중소기업들의 입지난이 극심했을 것이다. 또 신도시들이 건설되지 않았더라면 주택난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을지 모른다. 소기했던 바의 수도권정책이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되었다더라면 오늘날의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도권 분산정책은 이처럼 큰 사회적 비용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비용의 크기도 문제지만 경제적 약자가 주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단순화시켜 이야기한다면, 입지규제정책은 입지비용을 높여서 이를 부담하지 못할 사람을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정책이다. 내가 아닌 남을 지방으로 가라고 하고, 나는 수도권에 남아 교육·고용·행정 및 여타 서비스를 즐기자 할 때 결국 저소득층과 영세기업이 분산의 대상이 되어 글자 그대로 지방으로 내몰리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80년대말의 경험은 집을 짓지 않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지 않으며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소홀히 한다면, 인구분산 이전에 사회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로 해서 예외적인 시책들이 빈번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 분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착

정책적 노력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바로 입지규제들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린벨트는 수도권의 공간적 팽창을 촉진하여 기반시설 투자소요와 통근비용을 확대하였으며, 서울의 지가를 높여 도시내의 녹지공간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교육시설의 경우에도 지방분교로의 통학이 큰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현재의 입지규제들은 한결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이나 토지개발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가진다. 그러나 용적률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대형건물이 다수의 소형건물보다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하나의 큰 공장이 그만한 공장면적을 차지하는 다수의 소형공장보다 오염원배출이 더 많거나 공해방지에 태만하다고 믿을 근거도 없다. 관광지개발이나 주택건설에도 유사한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다수의 영세규모 난개발이 환경적·기능적·심미적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분산의 명분이 국민정서화되었다시피 한 현실에서는 분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시설과 편익이 그대로인 채로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은 그 비현실성과 배후에 숨겨진 이기심으로 인해 좋은 정책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 재정립되어야 할 수도권정책

향후의 국내의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수도권정책이 가진 부작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수도권정책을 재정립해야 할 시급성이 크다. 지금까지의 수도권정책을 학생들의 달리기 경기에 비유하자면, 한 학생이 너무 앞서 나가니까 선생님이 그 앞을 가로막으며 뒤쳐진 학생들을 기다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았다. 다행히도 선생님이 굼뻐기 때문에 그 학생의 속력이 크게 처지지 않았고 학교전체의 평균기록이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세계경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들어갔다. 이는 다른 학교의 일류선수들과 겨루어야 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으며, 이제는 뒤쳐진 학생들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국가간 경쟁은 구체적으로 대도시간의 경쟁으로 나타날 터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주자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의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교육기능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국적 기업들의 동북아지역 본사기능을 수용할 만한 대규모 건물들이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러 분야의 국제적 고급두뇌가 교류하며 정착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관광 위락시설도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면 수도권의 일상적 생활 환경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어 외화획득에 기여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도 수도권에 더 많은 질 좋은 시설과 기능이 입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투자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투자재원은 수도권의 주민과 기업들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경제 활동이 전체로서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통제하는 데 그 역할을 한정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와 비교한다면 장래를 위한 민간투자를 방해만 하지 않아도 정부가 큰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육상경기의 비유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앞선 학생을 가로막는 것이 뒤처

진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다. 앞선 학생이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뒤처진 학생에게 힘을 보태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 아닐까?

현실로 돌아와서, 수도권외의 고삐를 풀어줄 때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제기되지만, 이에 대해 몇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과연 인구나 산업의 수도권입지를 막으려 했던 30년 가까운 정책적 노력이 성공했다거나, 또는 앞으로 성공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수도권 분산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과거 실적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전국적 또는 지역적 인구추세는 큰 강의 흐름과

같이 정부가 조약돌 몇개를 던져서 막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지방자치체가 정착되면서 분산정책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규제를 철폐 또는 회피하고자 노력할 것이므로 규제가 더욱 무력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그러면 수도권 분산정책이 지방발전에 도움을 주었을까? 수도권 분산이 강조된 이유 중에는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펴기 어려웠다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지방에 줄 돈은 없고, 권한을 주기는 싫고, 심지어는 수처에 걸쳐 계획했던 정부기관의 지방이전마저도 추진이 어려워지자, 인구나 산업의 수도권입지를 막아서 이들이 지방에 정착하기를 강요했던 것이다. 이 기대가 크게 어긋났으니 결국 정부는 그간 지방발전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지역발전은 지방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적절한 투자와 권한의 이양으로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더욱 무익한 제스처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 있어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는 마당에 수도권

에서 공장증설을 막는다면 이 공장은 지방보다는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민간기업의 특출난 활력 때문에 우리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호사를 즐기고 있지만, 현재의 기업여건에서 민간의 활력이 언제까지나 계속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관련된 토지·교통·교육·행정·재정 측면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 수도권정책의 목표는 환경보호와 기반시설의 확충

필자는 지금까지 수도권 분산정책이 큰 효과 없이 많은 부작용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임을 지적하였다. 비록 현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 법령을 대폭 개편하여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였으나, 아직도 대형건물, 공장 및 대학 등의 신증설에 대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이익을 주는 입지규제의 기조로부터 탈피하지 못하였다.

인구수는 정책의 목표가 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지표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책목표는 환경보호와 기반시설의 확충이라고 생각된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저절로 환경이 정화되는 것이 아니며, 인구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오염이 심해지는 것도 아니다. 토지개발을 억제하고 시설설치를 막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한 간접적 접근일 뿐이며 그 효과는 작다. 개별시설의 오염원배출을 통제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기반시설 확충도 과밀·혼잡을 막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건 기반시설을 위해서건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법령들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수도권 분산정책은 전면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정책을 '분산'으로부터 '기능제고'로 전환하는 주장에 대해 여러 반론이 예상된다. 상당부분에 대해 앞서 논의가 되었지만, 중복을 무릅쓰고 두 가지점만 더 지적하겠다.

우선, 분산정책을 포기할 경우 모든 국민과 산업이 수도권에 몰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인구추이의 강한 추세성 때문에 분산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면, 바로 그 이유로 분산정책의 폐기도 큰 영

향이 없을 것이다. 더욱이 60, 70년대보다는 사회가 훨씬 안정되어 있어 급격한 지역간 인구이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주택 및 토지가격, 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기업과 주민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인데, 실제로 원자재조달과 판로, 각종 기업서비스 조달에 애로가 없는 대기업공장은 자발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한 가지 문제는 재벌문제이다. 수도권권의 공업입지규제로 대기업공장들이 큰 제약을 받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규제의 폐기는 곧 이들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정책은 제아무리 합리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 정부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재벌기업들의 행태가 국민의 호감을 사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국민의 기업이라는 공감대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 몇년 사이에 재벌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대표선수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과거의 이미지를 상당부분 바꾸어 놓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들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을까? 예컨대, 지방소재 대학을 인수하여 일류수준의 대학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고급인력을 자체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

## 경제상식

### • 재정팽창지수

재정팽창지수란(FI:Fiscal Impulse Indicator) 재정이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재정팽창지수는 정부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수지변동분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로 계산된다. 재정팽창지수가 '+'이면 재정팽창, '-'이면 재정긴축, '0'이면 재정이 경기 중립적임을 의미한다.

70년대 중반 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한 재정팽창지수는 미국·독일 등에서 정책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수지 작성을 계기로 재정팽창지수를 계산, 재정이 실물 경제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95년 고용동향

이화영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작년 한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는 어느 산업,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늘었고,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이 지낸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통하여 살펴 보자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뚜렷

95년의 고용동향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호황에 따른 고용수요 증대로 취업자 증가율(2.7%, 54만명)이

노동공급측면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2.3%, 47만1천명)을 상회하여 실업자가 7만명 감소하였다. 한 나라의 노동력규모를 결정하는 15세 이상 인구는 3,355만8천명, 이 중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제활동인구는 2,079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2%로 94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자는 76.5%, 여자는 48.3%로 94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고 여성의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취업에 적합한 정보처리, 학원강사, 교습, 이·미용 등 서비스 부문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성별·연령계층별로 세분하여 보자.

15~19세 청소년 계층에서는 출산력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진학률의 상승으로 인해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가 1.1%포인트, 여자가 1.0%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20대 연령 계층에서는 남자의 경우 진학률 상승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초반에 0.3%포인트, 20대 후반에 0.6%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진학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노동시장의 진입에 힘입어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초반은 1.4%포인트, 20대 후반은 2.2%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주력노동계층인 25~5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가 90%대인 반면, 여자는 출산 및 육아, 가사부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명, %, %p)

	92년	93년	94년	95년	95/94년	
					증 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31,898	32,400	32,939	33,558	619	1.9
경제활동인구	19,426	19,803	20,326	20,797	471	2.3
(참가율)	(60.9)	(61.1)	(61.7)	(62.0)	(0.3)	-
(남 자)	(75.5)	(76.0)	(76.4)	(76.5)	(0.1)	-
(여 자)	(47.3)	(47.2)	(47.9)	(48.3)	(0.4)	-
취업자	18,961	19,253	19,837	20,377	540	2.7
제조업	4,828	4,652	4,695	4,773	78	1.7
실업률	2.4	2.8	2.4	2.0	-0.4	-



담이 비교적 큰 20대 후반에 경제활동참가율이 40%를 기록한 후 30~54세 계층에서는 50~60%의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55세 이상 고령 계층의 참가율은 남자 64.6%, 여자 35.9%로 남자가 여자의 약 2배 수준이며, 94년 대비 증가폭을 보면 남자는 0.3%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0.6%포인트 증가하였다.

### 정보처리 등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증대를 주도

95년 취업자는 경기확장의 지속으로 94년에 비하여 2.7%(54만명) 증가한 2,037만7천명으로 사상 처음 2천만명을 초과하였다. 이들 취업자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농림어업은 254만1천명으로 94년 대비 15만8천명(5.9%) 감소하였는데 이 중 남자가 9만2천명, 여자가 6만6천명

으로 남자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477만3천명으로 94년 대비 7만8천명(1.7%) 증가하였는데 제조업내에서도 전기기계 및 기계장비 등 중공업 부문은 경기호황 지속으로 94년 대비 14만3천명(6.3%) 증가한 반면, 가죽·신발 등 경공업 부문은 경기부진으로 6만4천명(2.6%) 감소하여 경기의 양극화현상이 노동시장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표 2〉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p)

	94년			95년			95/94년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15~19세	10.4	15.6	12.9	9.3	14.6	11.9	-1.1	-1.0	-1.0
20~24세	58.3	64.7	62.1	58.0	66.1	62.8	-0.3	1.4	0.7
25~29세	90.2	45.6	68.5	89.6	47.8	69.1	-0.6	2.2	0.6
30~39세	96.9	53.8	76.0	97.0	53.2	75.8	0.1	-0.6	-0.2
40~54세	94.6	61.6	78.4	94.7	62.2	78.8	0.1	0.6	0.4
55세 이상	64.9	35.3	47.9	64.6	35.9	48.2	-0.3	0.6	0.3
전 체	76.4	47.9	61.7	76.5	48.3	62.0	0.1	0.4	0.3

〈표 3〉 성별·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94년			95년			95/94년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농 립 어 업	1,427	1,272	2,699	1,335	1,206	2,541	-92(-6.4)	-66(-5.2)	-158(-5.9)
광 공 업	2,967	1,767	4,735	3,042	1,758	4,799	75(2.5)	-9(-0.5)	64(1.4)
제 조 업	2,930	1,765	4,695	3,017	1,756	4,773	87(3.0)	-9(-0.5)	78(1.7)
경 공 업	1,228	1,213	2,440	1,209	1,168	2,376	-19(-1.5)	-45(-3.7)	-64(-2.6)
중 공 업	1,703	552	2,254	1,808	588	2,397	105(6.2)	36(6.5)	143(6.3)
SOC 및 기타	7,438	4,965	12,403	7,776	5,261	13,037	338(4.5)	296(6.0)	634(5.1)
건 설 업	1,616	161	1,777	1,715	182	1,896	99(6.1)	21(13.0)	119(6.7)
도소매·음식	2,554	2,644	5,198	2,632	2,726	5,358	78(3.1)	82(3.1)	160(3.1)
사업·개인·공공	2,010	1,657	3,667	2,111	1,815	3,926	101(5.0)	158(9.5)	259(7.1)
금융·운수창고	1,259	502	1,761	1,319	538	1,857	60(4.8)	36(7.2)	96(5.5)
전 체	11,832	8,005	19,837	12,153	8,224	20,377	321(2.7)	219(2.7)	540(2.7)

註: \*괄호 안은 증감률임.



알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는 1,303만7천명으로 94년 대비 63만4천명(5.1%) 증가하여 지난해 고용증대를 주도하였다. 특히 정보처리·교육·법률·회계 및 개인 서비스 등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부문에서 25만9천명(7.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자가 15만8천명, 남자가 10만1천명 증가하여 이 부문에서 여자의 고용유발 효과가 컸음을 알 수 있다.

### 취업구조 안정화되는 가운데 여성인력의 전문화현상 나타나

95년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서 26만2천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54만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세분하여 보면, 남자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기능·기계조작·조립 등 단순 노무직에서 각각 18만2천명, 18만7천명 증가하였다. 여자 취업자는 종래의 일반적인 추세대로 서비스·판매직에서 가

장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 추세에 힘입어 전문·기술·행정·관리직과 사무직에서 각각 8만명, 6만2천명 증가하여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추세 속에서 여성인력의 전문화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상용·임시·일용직을 포함하는 임금근로자는 43만9천명(3.6%)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비임금근로자는 10만2천명(1.4%) 증가에 머물렀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17만1천명(3.1%)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

〈표 4〉 성별·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94년			95년			95/94년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235	839	3,074	2,417	919	3,336	182(8.1)	80(9.5)	262(8.5)
사무직	1,217	1,215	2,433	1,234	1,277	2,510	17(1.4)	62(5.1)	77(3.2)
서비스·판매	1,803	2,485	4,288	1,834	2,631	4,464	31(1.7)	146(5.9)	176(4.1)
농림어업직	1,405	1,267	2,671	1,310	1,201	2,511	-95(-6.8)	-66(-5.2)	-161(-6.0)
기 타 <sup>1)</sup>	5,172	2,198	7,370	5,359	2,196	7,556	187(3.6)	-2(-0.1)	186(2.5)
전 체	11,832	8,005	19,837	12,153	8,224	20,377	321(2.7)	219(2.7)	54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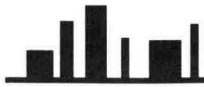
註: 1) 기계조작·조립 등 단순노무직

\* 괄호 안은 증감률임.

〈표 5〉 성별·연령계층별 실업률

(단위: %)

	93년			94년			95년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남 자	여 자	전 체
15~19세	12.9	10.0	11.2	10.2	8.9	9.4	19.1	7.5	8.2
20~24세	11.8	6.5	8.5	9.0	5.4	6.8	7.7	4.9	5.9
25~54세	2.6	1.0	2.1	2.4	1.0	1.9	1.9	0.9	1.5
55세 이상	0.7	0.3	0.5	0.7	0.2	0.5	0.9	0.3	0.7
전 체	3.2	2.2	2.8	2.7	1.9	2.4	2.3	1.7	2.0



는 7만명(3.5%) 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증가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의 40만5천명(상시:37만명, 일용:3만5천명)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보처리·회계·법률·교육·가사서비스 부문에서의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에서 일용근로자가 3만5천명 증가하였는데 이들 부문에서 시간제 취업·계약 및 파견직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은 임금근로자의 구성비가 85년에 54.1%에서 95년에는 62.5%로 10년 동안 8.4%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산업화의 진전으로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85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하여 취업구조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조업 평균 취업시간은 감소돼

취업자의 1주간 평균 취업시간은 94년 대비 0.1시간 증가한 52.4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농림어업의 평균 취업시간은 45.8시간으로 94년 대비 1.2시간 증가한 반면에, 비농림어업 부문인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각각 51.9시간, 58.4시간으로 94년 대비 0.4시간, 0.2시간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의 평균 취업시간은 경공업 52.0시간, 중공업 51.9시간으로 94년 대비 각각 0.2시간, 0.4시간 감소하여 취업시간의 감소는 주로 중공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94년 대비 3.0%(55만6천명) 증가하여 1,895만3천명으로 나타났

다. 한편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는 94년에 비하여 1.5%(1만9천명) 감소하였다. 특히 1~17시간 취업자는 29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7.8%(2만1천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성 및 고령자의 시간제취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35시간 취업자가 3.9%(4만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감소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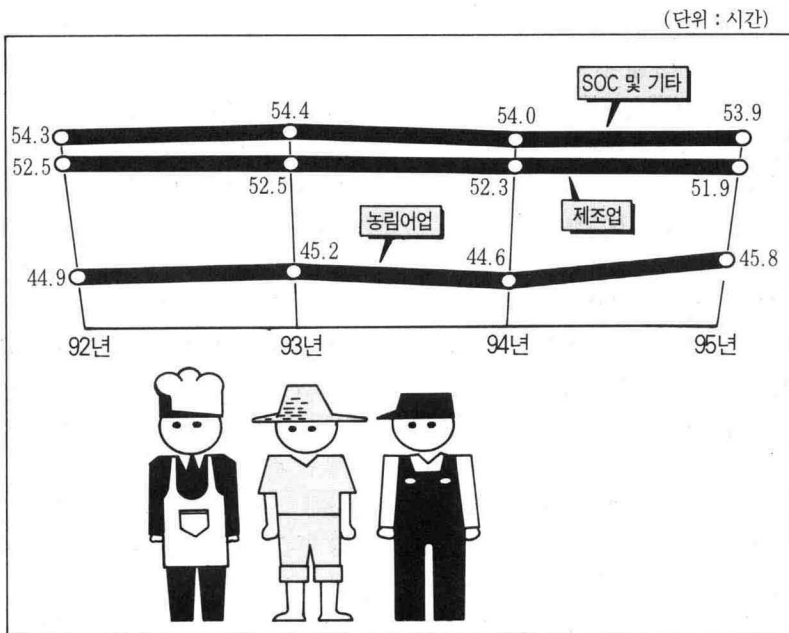
### 실업률은 2.0%로 사상 최저 수준 기록

지난해는 경기확장의 지속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등 고용기회가 확대되어 실업자가 94년 대비 7만명(14.3%) 감소한 41만9천명으로 나타났다으며 실업률은 2.0%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2.3%, 여자 1.7%로 남자가 여자보다 0.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실업률동향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15~19세, 20~24세 계층의 실업률이 8.2%, 5.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계층이 신규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마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력노동계층인 25~54세 연령계층의 실업률은 1.5%로 낮게 나타났다. 55세 이상의 고령층 실업률이 0.7%로 지난해에 비하여 0.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 같은 고령자의 실업률 증가현상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는 활발하지만 실제 취업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하겠다. 

〈그림〉 산업별 1주간 평균 취업시간



# 양도소득세

김연근  
국세청 민원봉사실장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첫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둘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셋째, 국외이주의 경우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새로이 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넷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둘째,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셋째,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상태의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넷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주택 다섯째,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면 지역의 상속, 이농 및 귀농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농어촌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잔금 청산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되므로 이 날이 양도·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한 달이 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판 경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당첨권은 아파트의 당첨일이 취득시기가 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첨권을 샀을 때는 잔금을 치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투기거래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 투기거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팔 때 둘째,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국제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팔 때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거래라도 부동산을 살 때와 팔 때의 경위와 이용상태로 보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자로 억울하게 무거운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자산별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양도·취득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계

산하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실지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등록세·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기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기에, 그 당시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판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기에 그 당시 시가표준액의 1%만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양도소득세는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서 3년 이상 된 자산은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된 자산은 양도차익의 15%, 10년 이상된 자산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 다음 다시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아지는 누진차등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2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은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는 3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40%(누진공제 300만원), 6천만원 초과는 50%(누진공제 900만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미등기자산은 각각 일괄적으로 50%, 7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토지·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기부등본 각 한 통씩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에는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서류 등입니다.

그리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면제받은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해에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령**

다음 호(6월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

#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김상원

보건복지부 공보관실 사무관

이번 4.11총선 투표장 중 20% 가까이 장애인들이 오르내리기 힘든 건물 2층 등에 설치되었다. 여러 곳의 장애인 단체들이 항의하자 몇 곳에서는 이를 1층으로 옮겼다. 투표장을 선정할 때 아예 장애인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예다. 물론 즉시 잘못을 시정했다는 사실은 장애인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그래서 요즘 '장애인 먼저' 운동이 사회지도층 인사 1천여명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데 불편한 점을 들어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운동이다.

이처럼 장애인을 아끼며 이들의 재활자립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그릇된 편견으로 많은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요즘 장애인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져 장애인과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

아 놓았다. 지극히 예외적인 사건들이라고 넘기면 되겠지만 그게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한 가족 가운데 장애인인 있는 가정은 전·월세를 얻을 때에 웃돈을 얹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장애인 법정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가장 많은 벌금을 물었고, 국가기관조차도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2.1%인데 장애인 실업률은 32.6%이다. 그나마 취업직종도 단순노무직이 70%이며 임금수준도 40만원 이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법률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난 5년 동안 0.5%만을 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어 이들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환경은 건강한 사람 중심의 경쟁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갈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신체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요약)”라고 규정되어 국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립추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을 사랑으로 대하자는 말도 장애인을 올바르게 보는 시각은 아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비나 시혜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것 즉, ‘人權’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말하기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생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전체 장애인의 90%가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란 남이 아닌 바로 나’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예비 장애인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애인 문제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권리 차원에서 이해되도록 우리 모두가 자성하여야 한다.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문화국민이 되고자 한다면 장애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전환부터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다. **김상원**